

#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연구책임자 | 최수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KINU

통일연구원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머리말 .....	1
II. 북한의 산업 현황 .....	5
1. 주요 경제지표 .....	7
2. 산업구조와 현황 .....	8
III.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1): 1946~1989년 .....	17
1. 경제정책의 기초 .....	19
2. 산업구조의 변화 .....	29
IV.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2): 1990~2004년 .....	37
1. 경제후퇴기: 1990~1998년 .....	39
2. 경제회복기: 1999~2004년 .....	52
V. 북한산업 발전을 위한 남북한 협력 .....	69
1. 북한의 산업정책 방향 .....	71
2. 남북한 협력 방안 .....	75
VI. 맺음말 .....	89
참고문헌 .....	95
최근 발간자료 안내 .....	99

## 표 목 차

<표 II-1>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	7
<표 II-2> 북한 산업구조 비교 .....	9
<표 II-3> 남북한의 생산능력 및 생산량 비교 .....	11
<표 II-4> 남한 대비 북한의 산업별 기술수준 .....	12
<표 III-1> 공업총생산액의 목표와 실적 및 연평균 성장률 .....	21
<표 III-2> 북한의 무역규모와 무역의존도 .....	26
<표 III-3>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 .....	28
<표 III-4> 생산수단 생산부문과 소비재 생산부문의 비중(1) .....	29
<표 III-5> 생산수단 생산부문과 소비재 생산부문의 비중(2) .....	30
<표 III-6> 부문별 공업총생산액의 비중(1) .....	33
<표 III-7> 부문별 공업총생산액의 비중(2) .....	34
<표 III-8>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1946~1983) .....	35
<표 IV-1>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대외무역규모(1990~1998) .....	46
<표 IV-2> 북한의 부문별 고용인구 .....	48
<표 IV-3>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1990~1998) .....	49
<표 IV-4>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1990~1998) .....	51
<표 IV-5>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대외무역규모(1999~2004) .....	61

<표 IV-6> 수출 상품구조의 변화(2000~2004) .....	63
<표 IV-7> 수입 상품구조의 변화(2000~2004) .....	64
<표 IV-8> 산업별 성장률(1999~2004) .....	65
<표 IV-9>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1999~2004) .....	67
<표 IV-10> 부문별 고용인구의 비중 변화 .....	68



# I

## 머리말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공장은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산업 활동이 극히 위축되어 생산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생산의 부진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직장을 이탈하면서까지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을 조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노동의욕과 사기가 떨어진 북한주민들의 직장이탈은 북한산업의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어 나타난다. 산업 생산 부진에 따른 북한의 경제난은 체제의 유지에 부담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

북한산업은 전반적인 기술수준의 낙후, 투자재원의 부족에 따른 생산설비의 노후, 노동자의 노동의욕 저하, 제조업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중공업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이 국방 및 군산복합형 중공업 부문에 편중됨으로써 경공업의 발전이 저해되었으며 이런 중공업부문조차 대부분 자체기술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생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경제난 심화에 따른 에너지 부족으로 산업설비의 유휴 비율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지난 50년 동안 북한의 산업구조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경제난이 극심했던 1990년대에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는 북한 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향후 북한 경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변화 요인과 그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북한 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산업구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1960년대 중반까지는 산업구조 관련 자료를 발표하였으나 이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1980년대 중 후반까지는 북한이 간헐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여 러시아 측에서 작성한 단편적인 자료가 존재할 뿐이다. 1990년 이후부터는 한국은행에서 북한의 산업구조 관련 자료를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및 러시아 측에서 발표한 자료와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자료는 산업부문에 대한 분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를 북한 자료와 러시아 측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1980년대 말까지의 기간과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한 1990년 이후의 두 기간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990년 이후의 기간은 북한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1990~1998년 기간과 플러스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1999년 이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제Ⅱ장 북한의 산업 현황에서는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와 함께 북한의 산업구조,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기술수준, 주요 업종별 현황 등을 언급하고 있다. 제Ⅲ장은 1946~1989년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경제정책의 기조를 살펴본 후 검토하고 있다. 제Ⅳ장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2)에서는 1990년 이래 산업구조의 변화를 경제후퇴기(1990~1998년)와 경제회복기(1999~2004년)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제Ⅴ장 북한산업 발전을 위한 남북한 협력에서는 우선 북한의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북한산업 발전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제Ⅵ장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 II

## 북한의 산업 현황



## 1. 주요 경제지표

2004년을 기준으로 북한 인구는 남한 인구 4,808만 명의 1/2에 약간 미달하는 2,271만 명이다. 그러나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GNI)은 208억 달러로 남한의 약 1/33(3.0%) 수준이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914달러로 남한의 약 1/15(6.5%) 수준에 불과하다. 남한은 1960년대 초부터 외환위기가 닥친 1990년대 말까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1960년대 후반부터 저성장으로 접어들었고, 특히 199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왔다. 그 결과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었다.

남북한 경제력 격차의 원인은 남북한의 대외무역을 비교함으로써 가늠해볼 수 있다. 2004년 북한의 교역규모는 28.6억 달러로 2003년 대비 19.7%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남한과의 격차는 전년보다 확대되었다. 남한의 교역규모는 북한보다 2003년 156배, 2004년 167배(수출 249배, 수입 122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외무역 규모면에서의 커다란 차이는 경제력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표 II-1>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북한(A)		남한(B)		B/A(배)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명목 GNI (억달러)	184	208	6,086	6,810	33.1	32.7
1인당 GNI (달러)	818	914	12,720	14,162	15.6	15.5
인구 (천명)	22,522	22,709	47,849	48,082	2.1	2.1
교역규모 (억달러)	23.9	28.6	3,726.4	4,783.0	155.9	167.2
수 출	7.8	10.2	1,938.2	2,538.4	248.5	248.9
수 입	16.1	18.4	1,788.3	2,244.6	111.1	122.0

자료: 한국은행, “200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최근 북한은 1990년대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산업은 설비 노후, 에너지·원자재·외화 부족,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외자유치 부진 등으로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전력, 석탄, 금속 등 기간산업 현대화와 2002년 7월 경제개혁 조치 이후 농업, 경공업, 상업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회생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산업의 정상화와 경제회복이 크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좁혀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 2. 산업구조와 현황

### 가. 산업구조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광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1/3 이상을 차지하는 후진적 산업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자원이 군산 복합형 중공업에 상당부분 편중·배분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의 비중이 남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북한 경제정책의 특징인 중공업 우선, 대내지향적 발전전략, 외연적 성장, 국방·경제병진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초까지 북한은 농업보다는 공업을, 경공업보다는 중공업을, 민수공업보다는 군수공업에 치중해 왔다.

<표 II-2>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북한		남한	
	2003	2004	2003	2004
농림어업 (%)	27.2	26.7	3.8	3.7
광공업	26.8	27.2	26.8	29.1
광업	8.3	8.7	0.3	0.3
제조업	18.5	18.5	26.4	28.7
(경공업)	7.0	6.7	5.5	5.1
(중화학공업)	11.5	11.8	21.0	23.6
전기가스수도업	4.5	4.4	2.7	2.4
건설업	8.7	9.3	9.6	9.4
서비스업	32.8	32.3	57.2	55.5
(정부)	22.9	22.6	6.0	6.1
(기타)	9.8	9.7	51.2	49.4

자료: 한국은행, “200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남한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동안 1970년대에는 경공업, 1980년대에는 중공업에 치중하는 산업정책을 실시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첨단산업 및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구조조정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에는 진통과 비용을 치루었고,<sup>1</sup> IMF 외환위기를 경험했지만 현재의 산업구조는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북한의 산업구조는 한국에 비해 농림어업, 광업 및 정부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높은 반면, 제조업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농림어업의 비중은 26.7%(한국 3.7%), 광업은 8.7%(한국 0.3%), 정부서비스업은 22.6%(한국 6.1%)를 차지하고 있

<sup>1</sup> 장맹렬, “남북한의 산업구조 비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6), p. 246.

다. 반면 제조업은 18.5%(한국 28.7%), 기타서비스업은 9.7%(한국 49.4%)에 불과하다.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중은 북한이 각각 6.7%, 11.8%인 반면 남한은 각각 5.1%, 23.6%이다.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남한이 북한에 비해 중화학공업에 편중되어 있다.

## 나. 생산능력 및 생산량

북한의 산업 생산능력은 한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sup>2</sup> 화학섬유의 경우 남한의 5.8%, 철강 12.1%, 발전용량 15.6%, 시멘트 19.3%, 비철금속 32%, 화학비료는 51.2%이다. 상대적으로 비철금속과 화학비료의 생산능력은 높은 편이지만 자동차의 경우 남한 생산능력의 0.8%에 불과하다.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에도 불구하고 공작기계, 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의 생산능력은 한국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가전(TV, 냉장고 등), 지류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한국의 생산능력에 더욱 뒤지고 있다.

이런 산업 생산능력조차도 북한에서는 석탄, 전력 등의 에너지부문과 기초 소재 분야인 철강 등 산업의 부진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여타 산업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 생산능력 대비 2004년 생산실적은 대체로 10~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북한은 유휴설비가 매우 많다.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 비율은 자동차 13.6%, 화학섬유 14.1%, 철강 17.8%, 화학비료 18.5%, 비철금속 24.7%, 전력 2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의 경우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이 46.9%로 높아 북한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설비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sup>2</sup> 구체적인 수치는 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산업』(서울: 한국산업은행, 2000) 참조.

<표 II-3> 남북한의 생산능력 및 생산량 비교

구분	단위	생산능력			생산실적			D/B(%)
		한국(A)	북한(B)	B/A(%)	한국(C)	북한(D)	D/C(%)	
철강	만톤	4,966	600.2	12.1	4,752	106.8	2.2	17.8
비철금속	만톤	124	39.7	32.0	150.9	9.8	6.5	24.7
자동차	만대	433	3.3	0.8	346.9	0.45	0.1	13.6
화학비료	만톤	458.8	235	51.2	361.4	43.4	12.0	18.5
전력	만kW/억kWh	4,845	755	15.6	3,421	206	6.0	27.3
시멘트	만톤	6,227	1,202	19.3	5,433	563.2	10.4	46.9
화학섬유	만톤	304.7	17.7	5.8	197.8	2.5	1.3	14.1

주: 철강은 조강 기준, 생산능력은 2000년 기준, 생산실적은 2004년 기준임.  
 자료: 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산업』(서울: 한국산업은행, 2000); 한국은행, “200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생산능력에서보다 오히려 생산실적에서 북한 산업은 남한 산업에 비해 더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남한의 생산설비가동률이 북한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4년 북한의 철강 생산량 106.8만 톤은 남한의 생산량 4,752만 톤의 2.2% 수준이다. 생산실적에서 자동차는 불과 남한의 0.1%, 화학섬유는 1.3%, 전력은 6%, 비철금속은 6.5% 정도이다. 시멘트와 화학비료의 경우 그나마 남한 대비 10%를 약간 상회하는 생산실적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 다. 기술수준

남한은 선진국에 비해 약 5년 정도의 기술수준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공작기계, 정밀기계, 자동차 부문에서는 10년 이상의 기술격차가 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3</sup>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

는 남한의 산업별 기술수준과 북한의 기술수준을 비교해 볼 때 북한은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뒤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체로 북한은 남한의 1970~1980년대 중반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전력, 조선, 화학섬유, 방직, 제지 산업의 기술수준은 한국의 1960년대 후반 정도로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분야이다. 남한에 가장 근접한 기술을 보유한 비철금속부문의 경우에도 그 수준은 남한의 1990년대 초반 정도이다. 북한의 석유화학, 타이어, 판유리, 신발, 음식료품 산업은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이고, 화학비료와 시멘트 산업은 1970년대 중반, 정밀기계와 가전제품은 1970년대 후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북한은 철강, 공작기계,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화기술, 전기기기, 의류 산업에서는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컴퓨터는 1980년대 중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표 II-4> 남한 대비 북한의 산업별 기술수준

기술수준		산 업
1960년대	후반	자동차, 전력, 조선, 화학섬유, 방직, 제지
	초반	석유화학, 타이어, 판유리, 신발, 음식료품
1970년대	중반	화학비료, 시멘트
	후반	정밀기계, 가전제품
1980년대	초반	철강, 공작기계,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화기술, 전기기기, 의류
	중반	컴퓨터
1990년대	초반	비철금속

자료: 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서울: 한국산업은행, 2000)

<sup>3</sup> 위의 책.

북한의 기술수준이 낙후된 것은 자본주의 선진국과의 경제·기술 교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에 서구 선진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도입을 추진했으나 외채문제의 발생으로 더 이상 선진국으로부터 신기술과 설비를 도입할 수 없었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이 금속제품 위주의 저품위, 저부가가치 상품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기술 낙후로 인해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 산업은 기술수준의 낙후와 함께 생산설비의 노후화라는 문제도 지니고 있다. 국내 투자재원의 부족을 보충할 해외 차관도입 등의 수단을 북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사회주의권 국가의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노후화된 생산시설의 교체나 보수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북한은 투자여력의 현저한 저하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설비교체 및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 라. 주요 업종별 현황

북한은 철광석 자원을 바탕으로 “철은 공산주의이다”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철강공업의 육성과 발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일반강과 특수강 제조에는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였다. 그러나 북한 철강공업은 낙후된 설비와 자체원료에 의한 제강방식으로 품질이 조악하고 고로의 고압 조업기술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북한의 제철·제강소 중에 근대적 제강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은 1971~1976년에 구소련의 원조로 확장공사를 실시한 김책제철소뿐이다. 북한의 철강 생산능력은 2000년 기준으로 제선 542만 톤, 제강 600만

톤, 압연강재 404만 톤이다.

북한의 비철금속공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철금속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아연의 경우 한국의 품위 99.995%에 비해 99.95% 수준으로 품질이 떨어져 LME(런던금속거래소) 등의 국제시장에서 공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비철금속공업에 필요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2000년 현재 북한의 비철금속 생산능력은 연 8.8만 톤, 아연 24만 톤, 동 4.9만 톤, 알루미늄 2만 톤으로 총 39.7만 톤에 이르고 있다.

기계공업의 공작기계부문에서 북한은 범용, 대형 및 특수용도 공작기계의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에 따라 모든 산업의 생산설비를 제공하는 기초산업이면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수공업과도 직결되는 기계공업 육성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다. 따라서 군수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밀기계분야의 경우 부품 국산화 초기단계에 진입한 반면, 전자부품 부문은 낙후되어 있다. 전자 기술수준의 낙후로 정밀공작기계 등은 핵심부품을 수입하여 조립·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전기전자공업은 중공업과 연관된 산업용 전기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가전제품은 대부분 부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은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의 경우 펜티엄Ⅲ 800MHz급과 셀러론 633MHz급의 컴퓨터를 생산하는 등 주로 32비트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다. 자동화기술에 있어서는 단위 기계의 자동화 설비를 추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기기기 부문에서는 전선, 애자, 중소형발전기, 변압기 등 어느 정도 관련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용량 발전기, 자동화 관련 기기 부문은 낙후되어 있다. IT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음성인식 등 인식기술과 게임, 애니메이션 등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2002년 현재 3.3만 대 정도이고 기술수준은 한국의 포니 생산 이전 단계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여객수송용 버스나 승용차는 주요부품을 수입하여 조립·생산하고 있으나 고급 승용차, 대형버스, 고성능 덤프트럭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자동차 부품 국산화율은 60% 미만이며 정밀가공을 필요로 하는 핵심부품들 역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공업의 경우 북한은 자체의 원료, 기술과 설비를 이용한 석탄 화학이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원료수입이 필요한 석유화학은 석탄화학공업을 보완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석유화학공업은 생산설비가 계열화되어있지 않고 노후설비에 의한 구식 공정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의 기초화학제품 생산능력은 황산, 암모니아, 카바이드 등을 중심으로 328만 톤이나 석유화학부문 생산능력은 기초유분 13.4만 톤, 합성원료 1.8만 톤, 합성수지 4만 톤 등으로 남한의 생산능력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화학비료의 생산능력은 235.2만 톤으로 남한 대비 생산능력에서 북한의 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한은 비교적 풍부한 수력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무연탄의 매장량도 풍부해 전력생산에 유리한 입지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북한의 포장수력(수력발전 잠재력)은 약 830억kWh로 1km<sup>2</sup>당 77.4kW이며 이는 세계 평균 50kW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유리한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설비와 석탄의 생산 부진 등으로 발전소의 가동률이 저하되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전력품질의 경우 전

압이 일정치 않고 정전이 빈발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발전설비, 전력 변환장치, 배전설비 등에 비규격제품을 사용하고 보수유지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송배전 과정에서 누전에 의한 손실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조선공업은 내수용 중소형 어선위주의 생산에 머무르고 있으나 군수용으로는 소형 잠수정과 어뢰정 등의 건조가 가능하다. 전반적인 조선공업 기술수준은 선박 건조기술, 설비 및 건조능력 등의 면에서 한국의 1960년대 후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북한은 경비정, 어뢰정 등 소형함정 위주로 기술축적을 한 점으로 미루어 소형 다기능 선박의 건조기술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기준 북한의 선박 건조능력은 21.4만 톤으로 1983년 이래 거의 정체 상태이며 선박보유량은 81만 톤으로 한국 615.3만 톤의 13%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화학섬유공업은 석탄화학계열의 비날론과 인견섬유(비스코스레이온)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나 이들 화학섬유제품은 오래 전에 세계시장에서 도태되었다. 일부 석유화학계열의 아크릴 섬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3대 범용 합성섬유(나일론, 폴리에스터 및 아크릴 섬유) 중 나일론 및 폴리에스터는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기준 북한의 화학섬유 생산능력은 17.7만 톤, 직물 생산능력은 6.7억㎡으로 17,100여 대의 직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섬유공업은 경공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천연섬유원료를 사용하는 방직공업은 견방직공업이 다소 발달된 반면 모방직공업은 극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III

##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1) : 1946~1989년



## 1. 경제정책의 기초

### 가. 기본 목표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로 삼아왔다.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이러한 정책노선에 따라 토지개혁과 중요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실시되었으며 1950년대 말까지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화를 완성하여 모든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하였다. 동시에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난 국민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해 왔다. 즉 북한의 경제발전노선은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폐쇄적 자급자족 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

‘경제에서 자립’을 지향해 온 북한은 주체사상이 확립된 1960년대 후반부터 이를 더욱 강조해 왔다. 중·소 이념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경제적 자립을 정치, 외교 및 군사적 독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간주한 것이다. 북한이 추구해 온 자립경제는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기보다는 대내적으로 투자 재원을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조달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기술혁명 또한 자체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실질소득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구성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자급자족 경제를 뜻한다. 그렇지만 북한에서의 자립경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를 국내에서 자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북한은 중공업 우선의 대내지향적 공업화를 통한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해 왔다. 이와 함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행하는 정책을 일관

되게 추진해 왔다. 비록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국가였지만 북한은 이런 정책 하에서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국내외 경제상황, 개발계획 및 국제 정치·경제 여건 등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 전략을 구사해 왔다.

북한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해 온 중공업 우선정책, 대내지향적 정책 및 국방·경제 병행정책은 북한의 산업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초기부터 북한이 추진해 온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는 1980년대 말에 진행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그 중요성이 상실되고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혁명적 경제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구조 조정 및 산업 불균형을 시정해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 나. 경제정책의 영향

### (1) 중공업 우선정책

북한은 중공업의 육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중공업은 국가의 정치·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물질적인 기초로서 인식되어 왔고, 중공업의 발전은 경제·기술적 자립뿐만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과 더불어 현대 기술의 기초 아래 국민경제의 촉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은 경제의 급속한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수단·생산부문의 확대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식의 확대 재생산의 일반 이론을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I-1> 공업총생산액의 목표와 실적 및 연평균 성장률

기 간	공업총생산액			비 고
	목 표	실 적	연평균 성장률	
1947~1949	-	-	49.9%	
1954~1956	2.6배	2.3배	41.7%	3개년계획
1957~1960	2.6배	3.5배	36.6%	5개년계획
1961~1970	3.2배	3.3배	12.8%	1차 7개년계획
1971~1976	2.2배	2.5배	16.3%	6개년계획
1978~1984	2.2배	2.2배	12.2%	2차 7개년계획

자료: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96』 (서울: 통일원, 1996), pp. 320~321.

초창기부터 중공업 발전을 강조해 온 북한의 ‘사회주의 공업화’는 5개년 계획(1957~1960)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초기에 소요되는 많은 자본을 외자의 도입보다는 ‘사회주의적 축적’이라는 방식으로 내부에서 동원하려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 자본의 축적·조달 방법이란 매우 제한적이어서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고무하거나 주민의 소비를 억제하고 인내를 강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자본 확장의 원천인 순소득 증가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업화 노력은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업총생산액의 성장률은 1947~1949년 기간 연평균 49.9%에 달했고, 1954~1964년 기간에도 여전히 매우 높은 27.5%를 기록하였다.<sup>4</sup> 전후 3개년계획(1954~1956)과 5개년계획(1957~1960)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41.7%와 36.8%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60년대 중반까지 공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하였다. 여러 가지 원인

<sup>4</sup>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96』 (서울: 통일원, 1996), p. 320.

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이겠으나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계획경제 초기단계의 이점이라 할 수 있는 생산수단(자원, 자본, 노동)의 효과적인 동원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특히 1966년과 1969년 북한의 공업총생산액은 전년도 대비 각각 -2.8%, -1.3%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감소하였다.<sup>5</sup> 그 결과 3년간 연장된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12.8%에 머물게 하였다. 공업총생산의 성장 둔화는 경제침체를 가져와 북한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도 소련식 통제체제를 채택한 동구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개발이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자 경직된 통제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를 통해서도 더 이상 생산성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외연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1960년대 중반 이래 군사비 지출의 증가에 따른 투자재원의 전용은 중화학 공업 건설에 제약을 가져왔다. 중공업과 국방산업에 치중된 북한의 산업구조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비재의 생산을 등한히 하였다. 따라서 노력동원과 사상교육에 시달려 온 노동자의 사기는 저하되었다.

중공업 발전의 심화에 필요한 자본재의 부족과 기술의 낙후를 인식한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주체사상의 강조와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서구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대량 도입하였다. 1960년대 중·소 분쟁으로 원조의 격감을 경험한 북한은 구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면서 사회주의국가로부터 획득하기 어려운 기계·설비 및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선진 자본주의국가와의 경제관계를 모색하지

<sup>5</sup>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96』, p. 319.

않을 수 없었다.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재와 신기술의 대량 도입으로 북한은 6개년 계획(197~1976)의 공업총생산액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이 기간 16.3%의 연평균 성장률은 제1차 7개년계획 기간의 공업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에서의 경험이 부족했던 북한은 수출 부진에 따른 외화부족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서구 선진국에 대한 채무를 지불할 수 없게 되어 외채는 누적되었다.

군수산업과 연계된 중공업 우선정책의 결과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발전이 지연되는 등 북한은 산업발전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및 수송부문에서 만성적인 애로가 나타났고 다른 사회간접자본의 부족도 심화되었다. 더욱이 외채상환의 불이행에 따른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과 자본재 도입의 어려움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체의 원료, 기술 및 에너지에 의존한 공업화를 추진하도록 강요하였다.

한편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의 목표 중 하나인 공업총생산 2.2배 증가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제2차 7개년계획이 끝난 1984년 이후 2년 동안 북한은 새로운 경제계획에 착수하지 못하고 미진한 부문을 계속 조정하던 다음 1987년에 와서야 성장 목표가 하향 설정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의 공업생산 목표는 연평균 성장률 10%에 해당하는 1.9배가 증가하도록 책정되었다.<sup>6</sup>

---

<sup>6</sup>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96』, p. 321.

## (2) 대내지향적 발전정책

좁은 국내시장과 빈약한 부존자원을 가진 국가들은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대외무역과 국제경제협력을 중요시한다. 이런 국가들은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어 자본축적의 결핍으로 인한 투자재원의 부족 및 기술의 후진성을 선진 산업국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립경제의 건설을 최고의 경제목표로 삼아 추진해 왔다. 자력갱생에 바탕을 둔 자급자족 경제체제 하에서 대외무역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은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북한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낮은 대내지향적인 경제구조를 보여 왔다.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과 결부된 대내지향적 발전정책은 무역과 경제성장 사이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중요시하는 대외지향적 공업화 정책과는 달리 국내시장에 기반을 둔 산업발전에 치중함으로써 수출산업의 육성 및 적극적인 수출증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앙통제하의 자립경제의 추진은 수입대체정책으로 나타나 기본적으로 북한은 대외무역을 자급자족 경제건설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간주해 왔다. 즉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이 되더라도 국내 수요에 부족한 물품에 한정시키고, 반면에 수출은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요청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수입은 자립경제 건설을 위한 원료와 기계, 장비 등에 치중되었고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소비재 수입은 억제되었다.

대내지향적 발전을 추구한 북한의 공업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신기술과 자본재 도입이 필요할 때 수출 이외에는 다른 외화 조달방법이 제한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비록 북한의 수출상품 구조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이미 공산품 중심으로 바뀌었으나 국제경쟁

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혁신이 따르지 못하였고 노후화된 생산시설을 대체할 자본재 도입의 어려움은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의 부진을 초래하였다. 더구나 중공업 우선정책은 비교적 수출이 용이한 경공업 소비재 산업의 낙후를 가져왔다. 따라서 국제규격에 미달하는 낮은 품질의 북한 공산품은 경쟁력과 수요의 결핍으로 자본주의국가, 특히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웠다. 이러한 연화(soft goods)의 수출은 정치적인 배려에 의한 구상무역의 형태로 대부분 사회주의국가에 의존하였다.

산업화 과정에 의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북한의 무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무역의존도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20% 내외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처럼 북한의 무역의존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것은 북한의 대외무역이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결정의 메커니즘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수급에 기초하기보다는 자급자족 경제체제하에서 국내 산업화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규제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 무역의 또 다른 특징은 1978년과 1979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을 통해 무역적자를 경험했으며 무역수지는 계속 악화되어 온 것을 들 수 있다.<sup>7</sup>

---

<sup>7</sup> Soo-young Choi,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Structure and Performance" (Ph.D. Dissertation, Northeastern University, 1991), pp. 312~313.

<표 III-2> 북한의 무역규모와 무역의존도

(단위: 백만 달러, %)

	무역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1950	125.9	45.5	80.4	-	-	-
1957	230.4	89.4	141.0	24.5	9.5	15.0
1960	303.5	146.9	156.6	20.0	9.7	10.3
1965	482.6	210.6	272.0	20.6	9.0	11.6
1970	796.1	362.3	433.8	20.0	9.1	10.9
1974	2,139.4	713.7	1,425.7	29.3	9.8	19.6
1975	2,098.4	823.5	1,273.1	22.4	8.8	13.6
1980	3,451.2	1,627.1	1,824.1	25.5	12.0	13.5
1985	3,007.3	1,221.7	1,785.6	19.9	8.1	11.8
1990	4,776.8	1,857.1	2,919.7	20.7	8.0	12.6

자료: Soo-young Choi,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Structure and Performance" (Ph.D. Dissertation, Northeastern University, 1991), pp. 312~313; 한국무역협회, 『주요북한경제지표 1992』 (서울: 한국무역협회, 1992), pp. 40, 42.

북한은 교역상대국과의 형평과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초기에는 구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국가와의 무역에 우선권을 두었다. 이런 원칙은 1970년대 초반부터 완화되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국가와도 대외무역의 확대 및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수출품 가격의 하락 및 과도한 기계 설비와 자본재 수입으로 인한 무역적자의 확대, 채무 불이행으로 1970년 중반 이래 선진국과의 교역은 크게 위축되었다. 대내지향적 발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한 선진국과의 무역확대와 경제협력이 실패로 끝났지만 이것은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선전하여 온 북한도 경제성장을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 세계경제에 참여치 않을 수 없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주체사상 하에서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하여 다소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분야는 대외무역부문뿐이었다.

북한은 원자재, 소비재 및 내수용 산업기계와 장비들에 있어 높은 자급을 이루어왔다. 하나의 예로서 에너지 자급정책의 결과 북한은 1차 에너지원에서 수입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sup>8</sup> 이와 같이 에너지 자급자족정책은 비록 성공적이었지만 북한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원유와 코우크스 등)의 수입 비중은 30% 정도로 매우 높았다. 따라서 북한은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재의 도입을 최소한의 에너지 수입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내지향적 정책을 추진한 북한이 해외의존도가 낮은 자립경제로 성장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서구 선진국에는 물론 대만 등 신흥 공업국들에 비해서도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선진 기술과 자본재의 도입 없이 경제성장은 거의 불가능하고, 성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도는 매우 느릴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 불안정의 정도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신흥 공업국에서보다 대내지향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다.<sup>9</sup>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붕괴 및 구소련연방의 해체 등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대내지향적 경제발전의 한계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국방·경제 병행정책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에는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국방·경제 병행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1962년 전국토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sup>8</sup> 장영식, 『북한의 에너지수요와 공급』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p. 71.

<sup>9</sup> Bela Balassa, "Policies in Socialist and Private Market Econom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0, No. 2 (June 1986), pp. 138~159.

를 내용으로 하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966년 ‘국방·경제 병진책’을 채택한 이래 군사력 증강과 군비 확대를 계속해 왔다. 이 정책은 북한의 대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1970년대 이후에는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재정지출상 군사비 비중을 실제와는 달리 낮추어 발표하고 있다.

<표 III-3>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

년 도	1953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비중 (%)	15.2	6.2	3.1	8.0	31.3	16.4	14.6	14.4	12.0

자료: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96』 (서울: 통일원, 1996), pp. 139~140.

북한의 군사비 지출 비중은 1960년대 중반 이래 급속히 증가하여 1970년에는 예산지출의 31.3%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이후 군사비 지출 비중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80년대에도 15% 내외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북한은 군사비의 상당 부분을 타항목에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군사비는 재정지출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질군사비는 30% 내외인 58억 달러 수준에 이르러 국민총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sup>10</sup>

한편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은 군사력 증강과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군수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북한은 외화획득을 위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에 주력해 왔다. 비록 무기 수출에 따른 외화획득이 가능해졌으나 만성적인 외화부족난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위

<sup>10</sup> 이동휘, 『북한의 개방 가능성』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1), p. 19.

한 막대한 국방비 지출은 국내 자원과 자금의 생산 목적을 위한 투자의 위축을 가져와 북한경제의 발전에는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 2. 산업구조의 변화

### 가. 생산수단과 소비재 생산부문

한국전쟁 이전 1949년 북한의 생산수단 생산부문(중공업)의 비중은 59%로 소비재 생산부문(경공업)의 비중보다 18% 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전쟁기간 중 북한의 공업시설이 거의 파괴됨에 따라 생산수단 생산부문의 비중은 1953년 38%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후 공업시설이 복구되고 중공업 우선정책에 의한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의 공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생산수단 생산부문의 비중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에는 47.1%였으나 1960년에는 55%로 높아졌다.

<표 III-4> 생산수단 생산부문과 소비재 생산부문의 비중(1)

	1946	1949	1953	1954	1955	1956	1957	1959	1960
생산수단생산 (%)	52.0	59.0	38.0	47.1	51.7	54.0	54.2	55.0	55.0
소비재생산	48.0	41.0	62.0	52.9	48.3	46.0	45.8	45.0	45.0

자료: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서울: 통일원, 1996), p. 324.

북한은 1960년대 중반까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제구조로 전환하였다. 그렇지만 이미 1960년대 초반 이래 구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원조감소와 기술혁신이 아닌 생산요소의 양적 동원에 의한 북한의 중공업 위주의 정책은 경제성장에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동시

에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은 공업과 다른 부문간 불균형 성장을 가져왔고, 특히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부진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원조의 감소와 함께 생산재의 확대만을 강조하는 파행적인 경제구조는 소비재 생산의 부진을 초래하였다. 이에 앞서 북한은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의 주요 과업으로써 국민생활 향상과 경공업·농업의 동시 발전을 추진하였다. 1965년 생산수단 생산부문의 비중은 51.2%로 낮아지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 공업에서 차지하는 생산수단 생산부문 비율이 낮아진 것은 원조의 삭감에 따라 자본재 도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간 정비 투자만으로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복구 대상 시설이 없어지고 전적으로 신규투자에 의해서만 중공업의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중공업의 육성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도 균등하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나 실제 경제운용에 있어서는 생산력의 증대를 위한 생산재를 공급하는 중공업에 중점을 두어왔다.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970년에 이르면 생산수단 생산부문의 비중은 62%를 차지하게 되었다.

<표 III-5> 생산수단 생산부문과 소비재 생산부문의 비중(2)

	1965	1970	1975	1980	1982
생산수단생산 (%)	51.2	62.0	63.7	63.9	64.8
소비재생산	48.8	38.0	36.3	36.1	35.2

자료: 국토통일원, 『북한의 정치 경제』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99.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 기간에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고 국내 자원을 적극 개발·이용하면서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자체의 힘에 의해 경제를 다방면에서 종합적으

로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이것은 해외로부터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 도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중공업 어느 한 부문의 건설만 가지고서는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북한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7개년계획의 실적보고에서 북한은 소비재 생산부문과 관련하여 직물생산에 대한 실적만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도 주민의 소비생활과 직접 연관된 소비재 생산부문이 여전히 낙후하고 산업부문간 균형발전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2차 7개년계획에서 강조한 산업부문간 균형 확대의 필요는 공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생산수단 생산부문 비중의 현저한 증가를 억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 생산수단 생산부문의 비중은 1975년 63.7%에서 1982년 64.8%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 나. 부문별 공업총생산액의 비중

우리의 기준에 따를 경우 과거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공업부문에 는 광업, 임업, 수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광석채굴업(채굴공업)은 광업에 속하며, 임산·목재가공업(임업 및 목재가공)은 임업에 속한다. 이런 부문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북한의 공업총생산액은 어느 정도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문별 공업총생산액의 비중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발표 자료를 토대로 부문별 공업총생산액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공업의 생산구조는 군수산업과 관련이 높은 기계·금속공업,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경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기계·금속공업의 경우 1959년에 20%를 상회하였고, 1980년에는 33.7%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다소 비중이 축소되었으나 27%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공업부문에서 기계·금속공업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중화학공업에 속하는 야금공업의 경우 1961년을 제외하고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까지는 6~8% 정도였다. 1960년대 초반부터 야금공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 10.5%, 1980년 12.0%, 1989년에는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공업의 경우 1954년 3.1%에서 1963년에는 8.3%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후 1980년 9.5%까지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 말까지 비중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경공업에 속하는 방직공업과 식료품·기호품공업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공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직공업의 경우 1956년 18.4%에서 1963년 18.6%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식료품·기호품공업의 경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54년 18.5%에서 1963년에는 13.7%로 낮아졌다. 문방구·잡화공업(일용품공업)의 경우 1950년대 초반 2% 수준에서 1963년에는 6.6%로 그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펄프·제지공업(종이공업)은 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제혁·제화공업(신발공업)은 2%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비중이 축소되었다.

<표 III-6> 부문별 공업총생산액의 비중(1)

	1946	1949	1954	1956	1959	1960	1961	1962	1963
발전공업 (%)	3.4	1.6	0.6	0.7	0.3	0.3	0.3	0.3	0.2
연료공업	4.6	4.1	0.7	1.8	1.3	1.3	1.2	1.1	1.2
광석채굴업	6.7	8.1	9.3	6.1	3.9	4.0	3.9	3.1	3.2
야금공업	9.5	11.0	1.8	8.6	6.2	6.8	3.9	6.1	7.4
기계제작·금속가공업 <sup>1)</sup>	5.1	8.1	15.3	17.3	20.6	21.3	22.7	22.0	25.6
화학공업	10.1	9.5	3.1	4.7	5.5	5.4	6.1	7.0	8.3
의약품공업	0.3	1.0	2.3	1.5	3.6	4.0		2.5	
건재공업	1.0	2.5	1.4	4.8	6.3	5.9	5.2	4.9	5.7
방직공업	5.5	11.4	25.7	18.4	17.4	16.8		16.8	18.6
유리·도자기공업	0.8	0.4	0.9	1.2	1.7	1.7			
임산·목재가공업	12.4	6.4	7.7	6.1	3.4	2.9			2.9
팔프·제지공업	3.2	2.2	0.9	2.5	2.4	2.6			2.2
인쇄·출판업	1.9	1.2	1.4	2.1	2.0	1.8			
문방구·잡화공업	0.9	1.6	2.2	3.1	4.8	5.8			6.6
제혁·제화공업	0.2	1.4	3.0	2.4	1.5	1.5			1.3
고무공업	0.3	2.3	1.5	1.4	1.2	1.2			
수산업	2.7	6.2	2.3	3.1	2.1	2.1			
식료품·기호품공업	27.2	19.4	18.5	13.2	15.6	14.4			13.7
유지공업	0.4	0.2	0.5	0.7	0.2	0.2			0.2

주 1: 기계제작·금속가공업의 비중은 1964년 25.8%, 1967년 31.4%임.  
 자료: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96』 (서울: 통일원, 1996), pp. 326~327.

1970년 이후 식료공업을 제외한 경공업(방직공업, 신발공업, 일용품공업, 종이공업)의 비중은 15~16%(1970년 16%, 1980년 15%, 1989년 15.9%) 수준에서 변동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식료공업은 1970년 13%에서 1980년에는 10%로 이 기간 3% 포인트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후 식료공업의 비중은 1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표 III-7> 부문별 공업총생산액의 비중(2)

	1970	1980	1987	1988	1989
전기공업 (%)	0.3	0.7	1.5	1.5	1.2
연료공업	1.02	1.5	1.6	1.6	1.5
채굴공업	-	1.8	1.8	1.8	1.8
야금공업	10.5	12.0	14.8	15.2	15.3
기계 및 금속공업	-	33.7	27.5	27.2	27.2
화학 및 석유화학	8.0	9.5	9.8	9.6	9.6
건설자재	-	9.5	8.3	8.4	8.5
임업 및 목재가공	-	2.0	2.0	2.0	2.0
경공업 <sup>1)</sup>	16.0	15.0	15.2	15.8	15.9
식료공업	13.0	10.0	9.9	9.6	9.7
기타	-	6.0	7.6	7.3	7.3

주 1: 경공업에는 방직공업, 신발공업, 일용품공업, 종이공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소련국제경제정치연구소, 『북한경제개관 1989~1990』.

#### 다.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대체로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북한은 경제 관련 통계를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를 면밀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업 및 농업부문을 제외한 여타 부문의 비중은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찾아볼 수 없다.

중공업 우선정책의 결과 초기 북한의 경제구조는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을 이룩하였다. 북한의 사회총생산액 중 공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46년도의 23.2%에서 1949년에는 35.6%로 높아졌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사회주의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업부문의 비중은 1956년 40.1%에서 1960년에는 57.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공업부문 비중의 성장세는 크게 둔화되었으나 공업부문의 비중은 1965년에 와서 64.2%를 기록하였다.

<표 III-8>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1946~1983)

	1946	1949	1953	1956	1960	1962	1963	1964	1965	1970	1983
공업 (%)	23.2	35.6	30.7	40.1	57.1	61.0	60.6	62.3	64.2	65.0	66.0
농업	59.1	40.6	41.6	26.6	23.6	21.3	21.5	19.3	18.3	20.0	20.0
운수·채신	1.6	2.9	3.7	4.0	2.2	2.8	2.8	2.8	-	-	-
기본건설	-	7.2	14.9	12.3	8.7	9.1	9.2	9.8	-	-	-
상품유통	12.0	9.4	6.0	10.8	6.0	3.6	3.8	3.8	-	-	-
기타	4.1	4.3	3.1	6.2	2.4	2.2	2.1	2.0	-	-	-

자료: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96』 (서울: 통일원, 1996), p. 124; John Holliday, "North Korean Enigma," in Gordon White et al., eds, *Revolutionary Socialist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Sussex, U.K.: Wheatsheaf Books, 1983), p. 125; 국토통일원, 『북한의 정치 경제』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96.

194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급격한 공업화는 경제의 초기 단계에 있어 북한공업이 매우 낙후되고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상대적으로 공업부문에서 높은 성장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미약한 경제기초는 특히 1950년대 후반의 이례적인 공업화 진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전쟁 후 재건기간 북한이 구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국가로부터 받은 막대한 원조와 더불어 노동력과 유희자본을 강제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 주된 원인이다.

북한산업에서 차지하는 공업부문 비중의 증가 추세는 1960년대 후반부터 거의 멈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후 공업부문의 비중에서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1970년 공업부문의 비중은 65%였으나 1983년에는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공업화 또는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른 발전전략이 1960년대 말을 전후로 더 이상 탄력을 받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공업화는 상대적으로 북한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 비중의 위축을 가져왔다. 1946년 사회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의 비중은 59.1%였으나 1956년에는 26.6%로 낮아졌다. 농업부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65년에는 18.3%까지 축소되었다. 그러나 1970년 농업부문의 비중은 20.0%로 1965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초반 운수·체신부문과 기본건설부문의 비중에는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운수·체신의 경우 2%를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본건설은 9% 내외의 수준에서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품유통부문에서는 1960년대 초반까지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상품유통부문의 비중은 1956년 10.6%에서 1960년에는 6.0%, 1962년에는 3.6%까지 낮아졌다. 즉, 1950년대 말까지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 국유화와 농업집단화가 완성됨에 따라 사적 거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상품유통부문의 비중이 위축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IV

##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2) : 1990~2004년



## 1. 경제후퇴기: 1990~1998년

### 가. 경제기조의 변화: 혁명적 경제전략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은 그 실적이 전반적으로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함으로써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스스로도 1993년 12월 8일 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를 통해 제3차 7개년계획의 성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시인하였다.<sup>11</sup>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로 북한은 1989년 말 이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와해로 이들 국가와 체결했던 무역협정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되고 경제협력이 부진했음을 들고 있다.

통일원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수행실적 중 국민소득은 목표 대비 51.8% 수준에 머물렀으며 총교역량은 1988년 52.4억 달러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1993년에는 26.4억 달러로 발표하였다.<sup>12</sup> 그리고 주력산업부문의 목표수행율은 극히 낮아 대체로 20~5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공업생산의 목표는 1.9배였으나 실적은 1.4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수행률은 78.9%에 불과하였다. 제3차 7개년계획의 성장목표가 이전의 어느 계획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이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분명한 것 같다.

제3차 7개년계획 실패의 대외적 요인에는 북한이 지적하고 있는

<sup>11</sup> “제3차 7개년 계획 수행정형에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보도,” 『로동신문』, 1993년 12월 9일.

<sup>12</sup> 제3차 7개년계획 기간 북한은 국민소득을 1.7배, 대외무역액을 3.2배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통일원의 평가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의 국민소득은 0.88배, 무역액은 0.74배로 나타나 오히려 감소하였다. 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서울: 통일원, 1994), p. 145.

것처럼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가 자리잡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로 인해 북한이 이들 국가와 체결했던 장기 무역협정이 사실상 파기되었고 그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 왔던 설비부품, 원유, 원자재 등의 공급 감소는 북한의 산업생산 위축과 무역침체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 계획 수립 당시 자원조달 계획은 1985년 12월 체결된 『북·소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등 소련의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 경제사정의 악화로 지원 약속의 상당부분이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제3차 7개년계획 실패는 자원조달 여력의 한계, 자원배분의 왜곡 심화 및 노동의욕 침체 등과 같은 대내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었지만 매년 예산을 팽창 편성함으로써 이 계획 착수 전에 이미 국내자본의 동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이러한 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실질군사비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김부자(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관련 사업과 대대적인 기념비적 건설사업 등 비생산 부문에 대한 지출을 계속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재 공급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소비생활 여건이 악화됨으로써 노동의욕이 오히려 감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향후 2~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하고 혁명적 경제전략인 3대제일주의(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기본전략으로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식량 및 소비재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만 증대가 권력승계 및 체제수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농업, 경공업 및 무역 육성을 통해 주민생활수준 향상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려 하였다. 완충기의 혁명적

경제전략으로 북한이 3대제일주의를 채택한 것은 당면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분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른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구조 조정차원에서 3대제일주의를 관철함으로써 이를 시정해 나가고자 하였다.

## 나. 3대제일주의 추진

### (1) 농업제일주의

북한의 곡물생산은 198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놓여 있었고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영농기반이 와해됨으로써 더욱 감소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가장 먼저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나가기도록 강조하였다. 북한의 농업제일주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농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국가적 힘을 집중하여 농업문제를 원만히 풀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있는 것’으로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sup>13</sup> 이것은 농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투자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책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농업제일주의가 실시된 첫해인 1994년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증가율은 전년

---

<sup>13</sup> 최명규,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를 창설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합법칙적 요구,”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1), p. 20; 한충석, “농업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요구,”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2), p. 5.

도의 2.1%에서 6%로 늘어났다.

농업제일주의 방침은 ‘농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주의 농촌경제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sup>14</sup> 김일성은 『사회주의 농촌테제』 발표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전국농업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협동적 소유를 보다 사회주의적 소유에 근접한 형태인 전인민적 소유로 점차 전환하도록 지시하였다.<sup>15</sup> 실제로 북한은 1994년 12월에 평양시 만경대구역내 협동농장들을 통합하여 ‘만경대구역 국영농장’으로, 그리고 평남 숙천군내 협동농장들과 농업관련 기업소들을 통합하여 ‘숙천군농업연합기업소’로 재편하였다.

농업연합기업소의 창설은 분명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의 강화인 동시에 농업에 대한 국가적 장악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연합기업소는 군(郡)단위의 여러 협동농장과 국가기업소, 국영농목장을 하나로 묶어 제각각 경영상 자율성을 부여하는 2중독립채산제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업적 지도를 실현하고 국가의 관리하에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다. 농업제일주의는 사회주의적 농업지도체계의 강화라는 본질적인 제약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지만 농업에 국가적 지원을 늘리고 곡물생산 증대에 일차적 관심을 둔다는 의미에서 이전보다 투자의 우선성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

<sup>14</sup> 한충석, “농업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당의 혁명적 경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요구,” p. 4.

<sup>15</sup> 김일성, “사회주의 농촌 테제의 기치 높이 농촌 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위하여 (1994년 2월),”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323~326.

## (2) 경공업제일주의

북한에서 완충기 전략의 하나로 경공업제일주의가 채택된 것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생필품 부족 문제 해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공업제일주의는 이전부터 경공업 발전의 방침 속에서 강조되어 왔던 인민소비품 증산을 국가적 차원의 전략으로 더욱 구체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공업제일주의는 생필품 부족문제를 타개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잠재력을 다 동원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획기적 조치’이며 ‘경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경제전략’이다.<sup>16</sup>

경공업제일주의는 대규모의 중앙경공업으로부터 중소규모의 지방공업과 8·3인민소비품 생산단위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여러 가지 인민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소비품의 품종을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경공업제일주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 주로 지방단위의 자체노력과 최대한의 예비동원을 통해 경공업제품의 증산과 지방공업의 발전을 이루어 인민생활을 향상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비품 공급을 담당하는 지방 상업일꾼들의 헌신을 촉구하는 ‘정춘실운동’과 지방공업의 발전을 위한 대중들의 자체적 노력을 촉구하는 ‘맹산군 따라배우기 운동’이 강조되었다.<sup>17</sup>

<sup>16</sup> 서승환, “경공업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나서는 중요 전략적 과업,”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2), pp. 8~10.

<sup>17</sup> “이런 일꾼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이다: 전천군 상업관리소 소장 2중 노력영웅 정춘실동무에 대한 이야기,” 『로동신문』, 1991년 11월 22일; 정춘실운동 선구자 대회 보도와 관련 『로동신문』, 1994년 12월 10일 참고; “맹산군의 모범을 따라,” 『로동신문』, 1994년 12월 22일.

북한은 1994년 예산계획에서 경공업에 대한 투자증가율은 1993년의 4.1%보다 다소 높은 5.4%로 책정하였다. 이와 같이 경공업제일주의는 당장에 부족한 주민들의 소비품과 생필품 보장을 위해 경공업에 국가차원의 관심과 선차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경공업제일주의를 추진하더라도 기존의 중공업 위주의 축적 방식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제일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경공업제일주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소비재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생산수단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의 감소란 있을 수 없다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sup>18</sup>

### (3) 무역제일주의

북한은 김일성의 대외무역에 대한 강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 회의(1994.4.7)에서 정무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외경제정책을 활성화시킬 것을 결정하고 무역제일주의하에서 1992년에 채택된 신무역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무역제일주의의 방침은 대외무역에서 수출을 우선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거래형식과 방법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외무역의 구조개선은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높고 경쟁력 있는 자체의 완제품, 가공품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대적으로 수출한다”는 것이고 무역거래의 형식과 방법에서 방향 전환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진행하던 무역 형식과 방법에서 벗어나서 세계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래형식과 방

<sup>18</sup> 리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기하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완성과 우리 당의 혁명적 경제 전략,”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1), p. 3.

법을 적극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9</sup>

무역제일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수출상품의 품질 제고, 무역상대의 다각화와 무역형태의 다양화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80년대에 북한은 대외무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출을 늘리는 것이며 대외무역의 확대를 위해 무역상대의 다각화와 무역형태의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다만 무역제일주의는 대외무역부문에 대한 국가투자를 늘리며 이 부문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최단 시간에 무역의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룩하자는 점에서 이전의 대외무역 확대방침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무역제일주의는 1980년대부터 강조되었던 대외무역 확대방침이 1990년대 사회주의 시장붕괴라는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 국가와의 대외무역을 보다 강조한 의미가 강하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변화한 국제시장의 환경에 맞추어 무역제일주의 아래 새로운 무역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렇지만 자력갱생에 의거한 내부 원천의 철저한 동원 방침이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이를 위해서도 자본주의국가를 이용하여 자본주의시장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 부족한 것을 조달하겠다는 보완적 의미가 여전히 강했다.<sup>20</sup> 북한의 대외무역은 무역제일주의 하에서도 여전히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 위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적 대외무역 관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있었다.<sup>21</sup>

<sup>19</sup> 조강일, “무역제일주의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방침,”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2), pp. 11~13.

<sup>20</sup> 최경희, “현 시기 대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2), p. 51.

<sup>21</sup> 서성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은 자주적인 대외 무역 관계 발전을 위한 물질적 담보,”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 1), p. 11.

## 다. 산업구조의 변화

### (1) 국내생산과 대외무역

1990년대 북한은 유례없는 경제후퇴를 경험하였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대외경제관계의 급격한 축소 및 국내 생산활동의 위축으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은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1990년 41.7억 달러에 달했던 무역규모는 1998년에는 거의 1/3 수준으로 떨어진 14.4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이 기간 수출은 17.3억 달러에서 5.6억 달러, 수입은 24.4억 달러에서 8.8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표 IV-1>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대외무역규모 (1990~1998)  
(단위: %, 억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경제성장률	-3.7	-3.5	-6.0	-4.2	-2.1	-4.1	-3.6	-6.3	-1.1
무역규모	41.7	25.8	25.6	26.5	21.0	20.5	19.8	21.8	14.4
수출	17.3	9.4	9.3	9.9	8.6	7.4	7.3	9.1	5.6
수입	24.4	16.4	16.2	16.6	12.4	13.1	12.5	12.7	8.8

자료: 한국은행,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국내 생산활동이 위축된 것은 에너지 및 원자재의 공급이 계속 악화되어 왔기 때문이다.<sup>22</sup> 에너지와 관련하여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1990년 3,315만 톤이었으나 1998년에는 1,860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발전량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277억kWh에서 170억kWh로 떨어졌다. 원유 도입량은 1991년 189만 톤이었으나 1998년에는 60.9만 톤에 불과하였다.<sup>23</sup> 이와 같은 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 감소로 북한의

<sup>22</sup> 북한의 국내 생산실적은 한국은행,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참조.

국내 생산활동 기반은 거의 붕괴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기간(1990~1998년) 북한의 주요 광산물 및 공산품 생산실적은 다음과 같이 감소하였다. 광산물 중 철광석은 843만 톤에서 289만 톤, 비철금속은 24.1만 톤에서 9.7만 톤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공산품 중 강철은 336.4만 톤에서 94.5만톤, 시멘트는 613만 톤에서 315만톤, 비료는 88.9만 톤에서 39.2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화섬의 경우 생산량이 1990년 5만 톤에서 경공업제일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원충기 동안 소폭 증가하였으나, 1998년에는 3.5만톤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곡물 생산량은 자연재해가 극심했던 1995년과 1997년에 각각 345.1만 톤과 348.9만 톤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북한의 산업 부문별 고용인구에 대한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하다. 그렇지만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부문별 고용인구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1990년대 북한의 고용인구는 1,100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1990년대에 부문별 고용인구 비중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공업과 농업부문의 고용비중이 다른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1995년의 경우 부문별 고용비중은 공업 38.2%, 농업 30.8%, 교육·문화·보건 7.7%, 상업 4.6%, 건설 4.1%, 교통·통신 3.7%, 행정 2.3%, 기타 8.6%로 나타났다.

---

<sup>23</sup> KOTRA, 『200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2004).

<표 IV-2> 북한의 부문별 고용인구

(단위: 천명)

	1993			1995			1999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공업	4,118	1,922	2,197	4,284	2,001	2,283	4,410	2,063	2,347
농업	3,382	1,718	1,664	3,454	1,751	1,703	3,567	1,806	1,761
건설	464	352	112	460	350	110	482	367	115
교통·통신	402	285	117	415	294	121	434	310	124
상업	509	161	348	514	161	353	529	169	360
문화·보건	844	339	504	863	348	515	886	356	530
행정	251	153	98	258	157	101	265	161	104
기타	1,035	631	403	966	612	354	954	614	340
계	11,005	5,562	5,443	11,214	5,674	5,540	11,527	5,846	5,681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cember 31, 199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일제조사자료집』 1995, p. 513;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1990/6/Add.35 (May 15, 2002), p. 6.

부문별 고용인구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무엇보다도 거의 남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의 고용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고용인구 중 남자가 여자보다 약 15만 명 내외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의 고용비중이 여자보다 약 1% 포인트 높을 뿐이다. 여자는 공업과 상업, 교육·문화·보건 분야에 더 많이 고용되어 있는 반면, 남자는 농업, 건설, 교통·통신, 행정 등의 분야에 더 많이 고용되어 있다.

## (2)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경제침체기 동안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실물경제부문에서의 지속적인 감소는 북한경제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의 크기는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에

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의 경공업부문이 중화학공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적고 수입 원자재에 대한 의존이 낮기 때문이다. 동시에 3대제일주의의 하나로 추진된 경공업 제일주의에 따라 과거에 비해 경공업 제품 생산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농수산업부문의 경우 증감이 반복되어 나타났으나 수산물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였다. 전기가스수도업도 199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경제침체기 동안 서비스업은 1998년에 소폭 감소(성장률 -0.5%)하였으나 전반적인 성장 추세에 놓여있었다. 이것은 주로 비중이 큰 정부서비스업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다.

<표 IV-3>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1990~199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농림어업 (%)	-9.7	2.8	-2.7	-7.5	2.7	-10.4	0.5	-3.8	4.1
광공업	-4.0	-11.7	-15.1	-3.3	-4.1	-4.2	-9.7	-16.1	-3.9
광업	-5.5	-6.8	-5.7	-7.2	-5.3	-1.2	-11.9	-13.8	-6.1
제조업	-3.5	-13.1	-18.1	-1.9	-3.7	-5.2	-8.9	-16.8	-3.1
(경공업)	-0.7	-3.9	-6.8	4.3	-0.2	-4.3	-6.8	-12.5	-0.2
(중화학공업)	-4.3	-15.6	-21.6	-4.2	-5.2	-5.6	-9.8	-18.8	-4.6
전기가스수도업	-3.2	-4.4	-5.4	-8.6	4.2	0.1	-7.7	-9.5	-9.2
건설업	5.9	-3.4	-2.2	-9.7	-26.9	-3.2	-11.8	-9.9	-11.4
서비스업	0.9	3.0	1.3	1.4	2.4	1.7	1.1	1.3	-0.5
(정부)	1.2	4.4	2.4	2.2	3.3	2.8	1.8	2.2	-0.3
(기타)	0.4	0.3	-0.9	-0.3	0.5	-0.6	-0.5	-0.7	-1.1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

북한은 완충기의 경제전략인 3대제일주의를 통해 주민생활 향상과 수출증대 및 중화학 우선정책에 따른 산업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제후퇴가 지속되면서 북한이 내세웠던 이런 목표들은 거의 모두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실물경제의 위축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있었다.

경제후퇴기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 광공업부문 및 건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된 초기 년도인 1990년 북한 산업에서 차지하는 광공업부문의 비중은 40.8%였다. 그러나 경제후퇴기의 마지막 해인 1998년에는 그 비중이 25.6%까지 하락하였다. 이것은 광업과 제조업부문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광업의 비중은 9.0%에서 6.6%로 추락했고, 제조업의 비중은 31.8%에서 19.0%까지 하락했다. 한편 건설업의 비중은 1990년 8.6%에서 1998년 5.1%로 줄어들었다.

둘째, 경공업과 중화학공업간 산업 불균형 완화가 강요되어 나타났다. 경공업의 경우 1993년을 제외하고는 경제후퇴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공업 비중은 최저 6.2%, 최고 7.0%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경제후퇴기 중화학공업부문의 생산은 경공업부문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지속적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 결과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1990년 25.6%에서 1998년에는 12.6%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1990년 경공업의 4배 수준에서 1998년 2배 수준으로 축소되어 경공업과 중화학공업간 불균형이 크게 완화되었다.

공업부문간 불균형 완화는 경공업제일주의에 따른 경공업부문의 성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중화학공업이 경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 위축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간 불균형 완화는 북한당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개된 것이다.

셋째,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은 다른 부문과는 달리 서비스업은 경제후퇴기에도 성장했기 때문이다. 3차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비중은 1990년 18.0%였으나 1998년에는 35.6%로 높아졌다.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에는 정부부문의 비중 확대가 주된 역할을 하였다. 정부부문의 서비스업 비중은 1990년 11%에서 1998년에는 25.3%까지 높아졌다. 반면 기타부문의 서비스업 비중은 7.0%에서 10.3%로 높아졌을 뿐이다.

<표 IV-4>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1990~199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농림어업 (%)	27.4	28.0	28.5	27.9	29.5	27.6	29.0	28.9	29.6
광공업	40.8	38.0	33.8	32.9	31.4	30.5	28.0	25.5	25.6
광업	9.0	9.0	9.2	8.2	7.8	8.0	7.1	6.7	6.6
제조업	31.8	29.0	24.6	24.7	23.6	22.5	20.9	18.8	19.0
(경공업)	6.2	6.2	6.3	6.8	7.0	6.8	6.9	6.5	6.4
(중화학공업)	25.6	22.7	18.3	17.9	16.6	15.7	14.0	12.3	12.6
전기가스수도업	5.1	5.0	5.1	4.8	4.8	4.8	4.3	4.3	4.2
건설업	8.6	8.2	9.1	8.5	6.3	6.7	6.4	6.3	5.1
서비스업	18.0	20.9	23.5	25.9	27.9	30.3	32.3	35.0	35.6
(정부)	11.0	13.0	15.0	16.8	18.6	20.7	22.5	25.1	25.3
(기타)	7.0	7.9	8.6	9.0	9.3	9.6	9.7	9.9	10.3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

## 2. 경제회복기: 1999~2004년

### 가. 강성대국 건설의 경제정책

#### (1) 경제방침의 변화

북한은 1998년 8월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강성대국>을 제시하면서 김정일시대의 새로운 목표를 대내외에 선언하였다.<sup>24</sup> 북한은 강성대국을 “주체의 사회주의나라”로 규정하고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강성과 부흥은 자주의 길에 있으며 사회주의의 길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로동신문』 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자”에서 북한은 사상, 정치, 군사의 강국으로 정의하고 있는 강성대국을 지향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립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sup>25</sup>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북한은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에서 ‘우리식 경제구조’를 강조하고 있다.<sup>26</sup> 북한은 “우리식 경제구조는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을 핵심으로 하고 모든 경제부문이 조화롭게 갖추어진 자립적인 경제구조”로서 향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우리식 경제구조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

<sup>24</sup> “강성대국,” 『로동신문』 정론, 1998년 8월 22일.

<sup>25</sup>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자,” 『로동신문』 사설, 1998년 9월 9일.

<sup>26</sup>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1998년 9월 17일.

해 나갈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주장하면서 완충기의 혁명적 경제전략과는 구별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완충기의 경제전략은 완충기가 종료되는 1996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1997년의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북한은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의 요구대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1998년과 1999년 신년사 공동사설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경제방침은 농업증산을 통한 먹는 문제의 해결과 선행부문에서의 생산정상화로 바뀌어 나타났다. 즉 농업제일주의는 그 명칭이 사라졌으나 여전히 북한이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지만 경공업·무역제일주의는 사실상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 대신 경제난 해소의 일차적인 과제로서 선행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기간공업부문의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완충기에 농업, 경공업,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회생을 시도하였지만 경제난은 오히려 가중되었다. 농업부문에서 분조관리제의 개선과 나진·선봉지대에서의 일련의 개혁조치를 시행하였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외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에너지와 원자재 도입, 외자유치 및 수출시장의 확대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이와 같이 완충기의 경제정책 운용이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은 내부자원 고갈로 투자여력이 소진되었지만 외자유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제유지에 집착한 나머지 개혁·개방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대제일주의가 추진되고 부분적인 구조조정 조치가 시행된 완충기 동안 북한경제는 비공식부문이 확산되고 계획경제부문이 위축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완충기 동안 심화된 경제난과 계획경제부문의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1998년을 기점으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3대제일주의 관철에서 먹는 문제의 해결과 선행부문 정상화로 전환시켰다. 선행부문의 정상화는 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견지하는 것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우리식 경제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공업 우선정책에 대한 북한의 공식입장은 『로동신문』에 게재된 “최후 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와 “우리가 틀어쥐고 나가야 할 경제건설의 기본노선” 등의 사설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sup>27</sup> 즉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인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다시 되돌아 온 것이다.<sup>28</sup>

## (2) 혁명적 경제정책

1998년 이후 김정일이 제시한 경제발전 전략은 완충기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대체하는 혁명적 경제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다. 1998년 신년 공동사설에는 혁명적 경제전략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 운수, 금속 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건설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위력을 최대한

<sup>27</sup> “최후 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로동신문』, 1998년 1월 8일; “우리가 틀어쥐고 나가야 할 경제건설의 기본노선,” 『로동신문』, 1998년 1월 20일.

<sup>28</sup>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과 관련하여 북한은 1953년 8월에 열린 노동당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중공업의 우선적 성장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노선이 채택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1953년 제6차 전원회의 이후에도 중공업과 경공업의 우선 순위를 놓고 당내 갈등이 존재하였다. 1956년 4월 노동당 제3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5개년 계획 역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의거하면서 농업과 경공업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1956년에 들어와 발전노선과 관련한 갈등의 실질적 해결이 이루어지고 중공업 우선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현 시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부터 혁명적 경제전략의 내용을 농업과 선행부문 및 금속공업으로 전환하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재확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99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농업생산을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이라 하였으며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침으로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이모작), 종자혁명, 토지정리사업 등을 강조하였다. 전력과 석탄을 ‘인민경제의 생명선’으로 규정하고 철도수송과 금속공업 등의 강조가 이어졌다. 김정일체제의 공식 등장 이후 혁명적 경제전략의 축소와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의 변화는 2000년 공동사설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전투적 기치로서 혁명적 경제정책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농업생산을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 고리’로,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전선’으로 설명하는 있는 2001년 공동사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이 1998년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재개한 이래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먹는 문제와 관련된 토지정리사업 현장, 양어장, 목장 등의 장소였다. 북한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정리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과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며 적기적작·적지적작의 원칙에서 두벌농사, 종자혁명을 이루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를 기르고 풀과 고기를 바꿀 데 대한 방침에 따라 풀먹는 집짐승을 기본으로 축산기지를 꾸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전력공업과 석탄공업, 중소형발전소 및 대규모발전소 건설,

그리고 금속공업에 대해 1998년 이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 부문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력공업을 사회주의 건설의 전초선이라 하면서 동력문제 해결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공업의 한 부분인 전력공업은 생산과 기술발전을 위한 매우 긴요한 물질적 요소의 하나로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문보다 투자의 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먹는 문제의 해결과 생산정상화에 최우선의 관심을 부여하는 혁명적 경제정책은 농업과 동력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투자의 우선 순위는 농업과 동력부문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1999년 총예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지만 농업부문에서는 11%, 전력공업은 15%, 석탄·광업·금속·기계 등 기간공업부문 및 철도부문은 10% 증가하였다.<sup>29</sup> 2000년에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반면, 전력공업은 15.4%, 석탄공업은 12.3%, 농업부문은 5% 증가하였다.<sup>30</sup>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혁명적 경제정책의 추진방식으로 1950년대에 시작된 천리마운동을 부활시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벌여나가고 있다. 1998년 1월 김정일의 현지지도시 자강도의 자력갱생 강행군 사례를 ‘강계의 혁명정신’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따라 배위 제2의 천리마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sup>31</sup> 즉 북한은 절대적 노동량의 증가에 의한 대중동원과 내부예비를 총동원하는 수

<sup>29</sup> 『조선신보』, 1999년 4월 12일.

<sup>30</sup> 『조선중앙통신』, 2000년 4월 4일.

<sup>31</sup> “제2의 천리마 대진군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조선중앙방송』 논설, 1999년 2월 9일; “강계정신으로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로동신문』 사설, 1999년 9월 28일.

단으로 제2의 천리마운동을 주창하고 있다. 2000년 공동사설에서 혁명적 경제정책 관철의 모범으로 예시된 ‘락원의 10명 당원’ 이야기와 『민주조선』에 실린 안변청년발전소 등 기념비적 창조물의 건설 일화는 바로 이 같은 대중동원방식의 전형이다.<sup>32</sup>

## 나. 경제개혁의 시도

### (1) 경제개혁 조치의 내용

북한은 2002년 7월 1일부터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를 통해 북한은 물가와 생활비(임금)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였다. 국정가격은 평균 25배, 생활비는 평균 18배 인상하였고 환율은 70배 정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물질적 인센티브 강화, 배급제의 실질적 폐지 등을 단행하였다. 7.1조치를 통해 북한은 분배에서의 평균주의를 타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국가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고자 하였다.

7.1조치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경제개선 조치를 내놓고 있다. 2002년 하반기에는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등을 특구로 지정해 개방지역을 확대하였다. 2003년에는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였고, 국영상점 경영권을 기관·기업소에 이양하였다. 식당 등 서비스업에 대한 개인영업을 허용하는 등 상업부문에서의 개혁조치도 있었다. 2004년부터는 농업부문에서

---

<sup>32</sup> 한국전쟁기간 락원기계공장에 근무하던 당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수류탄을 만들었고 전쟁 이후 복구시기에는 자체의 힘으로 북한 최초의 대형 양수기를 생산했다. 또한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에서 군인들은 강추위 속에서 공사를 진행시켰고 여름에는 장마로 침수되자 물이 빠지기도 전에 장화를 태워 갭안을 밝히면서 공사를 계속했다. 『민주조선』, 2000년 12월 13일.

가족단위 영농과 공업부문에서는 일종의 기업개혁 조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7.1조치 이전에 이미 경제관리에서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신사고·실리 등 개혁 논리를 개발·강조해 왔다. 2001년 1월 신사고(新思考)를 제기한 데 이어 종자론·신자력갱생론·단번도약론 등을 내놓으면서 신사고를 보다 구체화해 나갔다. 10월에 김정일은 7.1조치의 모체라 할 수 있는 『경제관리개선 방침』을 하달하였다. 이 방침에서 경제개혁의 기본원칙은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면서 최대실리를 획득’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 방침의 주요 내용은 계획 분권화,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운용, 수익위주 기업평가, 실적주의 분배, 과학기술과 생산결합, 가격·임금 재조정, 불합리한 사회보장 정리 등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 7.1조치를 실시하고 이후 추가적인 경제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난 타개를 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비공식경제(암시장)의 확산과 공식경제의 붕괴에 따른 각종 사회일탈행위의 증가, 평균주의 분배의 부작용과 인센티브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경제난에 따른 국가재정의 고갈로 배급제 실시의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 (2) 경제개선 조치의 성과

2002년 7월 이후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 변화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 7.1조치가 시행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 경제 변화의 성공 여부를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의 성과

와 부작용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최근 북한 경제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는 성과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과 기업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및 노동의욕이 제고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의식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의식변화는 국가 계획부문과 국가의 공적부조가 축소되는 반면, 시장기능이 확대되고 수익성에 기초한 기업경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보수의 인센티브화, 실적에 따른 분배가 적용되면서 생활비 지급에서 평균주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평가가 종래 생산물 위주에서 이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들은 종전에는 생산만 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판매에도 관심을 두고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합시장에서는 경영자에게 품질, 상표, 경쟁의식 등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경영기법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들의 경우 배급제의 폐지와 성과에 따른 분배가 적용되면서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도 많아진다는 의식과 함께 책임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부업, 장사 등 개인의 상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적 경제활동이 생존차원에서 이윤추구로 진전되는 등 변화의 잠재력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둘째, 시장메커니즘의 도입 및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여전히 국가의 가격제정·통제 기능을 표명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기초한 가격기구가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메커니즘은 상업·유통부문에서는 거의 철저히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합시장은 물론이고 국가유통망인 국영상점도 시장과 불가피하게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메커니즘을 일부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기업소간 원자재 거래를 위해 개설한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도 다소 제약은 있으나 시장원리에 따

라 작동하고 있다.

셋째, 농업·경공업 등 일부 산업부문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상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7.1조치 이후에도 투자재원 부족,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등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증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농업·경공업·상업부문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영농의욕 증대, 토지이용률 제고 등으로 곡물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 농장의 농민들은 조건이 좋지 않아 농사를 단념했던 토지도 토지사용료를 내는 만큼 효과적으로 이용할 방도를 모색하거나 수매 등급을 잘 받기 위해 채소의 경우 품질 향상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2001년 395만 톤에서 2004년에는 431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공업부문에서는 공장·기업소의 경영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배인들은 수익 창출에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2003년 경공업부문의 성장률은 소폭이지만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경공업 부문에서 총 26개의 공장·기업소가 2004년 상반기 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상업부문에서는 종합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2003년 도소매업 성장률이 9.8%로 나타나 전체 성장률 1.8%를 훨씬 상회하였다. 이러한 상거래의 활성화는 “통일거리시장을 보면 북한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라는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의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소수이지만 개인의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에 따른 분배가 적용되면서 공장·기업소의 노동자, 서비스업 종사자, 협동농장 농장원 중 일부 개인들의 실질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8직동청년탄광의 탄부, 의암식당의 종업원, 청산협동농장의 농장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소속 노동자, 농민에게

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나아 수익을 내는 공장·기업소, 협동농장을 북한에서 찾기란 힘든 실정이다.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공장도 많다.

## 다. 산업구조의 변화

### (1) 국내생산과 대외무역

1999년대 말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였다. 1999년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2004년까지 매년 소폭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런 경제회복은 혁명적 경제정책의 핵심인 선행부문과 금속공업부문의 정상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회복기 북한의 대외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1998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28.6억 달러(수출 10.2억 달러, 수입 18.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IV-5>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대외무역규모 (1999~2004)  
(단위: %, 억 달러)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제성장률	6.2	1.3	3.7	1.2	1.8	2.2
무역규모	14.8	19.7	22.7	22.6	23.9	28.6
수출	5.1	5.6	6.5	7.4	7.8	10.2
수입	9.6	14.1	16.2	15.2	16.1	18.4

자료: 한국은행,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및 “200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석탄생산량은 1998년의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 2001년에는 2,310

만 톤으로 증가한 이래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4년 생산량은 2,280만 톤으로 2001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다.<sup>33</sup> 발전량은 다소의 기복이 있으나 증가추세를 보여 2004년에는 206억kWh로 증가하였다. 원유도입량은 1999년 31.7만 톤으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으나 2001년 이후에는 60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다.<sup>34</sup> 이와 같은 전반적인 에너지의 국내 생산 증가 및 최저 수준 이상의 원유도입량 유지 등으로 북한의 국내 생산활동 기반은 다소간 호전되었다.

1999년부터 북한의 주요 광산물 및 기초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생산실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철광석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에는 457.9만 톤을 기록하였다. 반면 비철금속은 1999년 11.1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해 2004년에는 1998년 수준인 9.8만 톤을 생산하였다. 강철은 1999년 124.3만 톤을 생산하였으나 이후 110만 톤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북한은 2004년에 563.2만 톤을 생산하였다. 비료의 국내 생산은 1999년 57.2만 톤이었으나 이후 감소추세로 반전하여 2004년에는 43.4만 톤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요 광산물 및 기초 공산품의 생산은 경제후퇴기의 최저수준에서 벗어났고, 철광석과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생산이 급증하였다. 한편 곡물 생산량은 2000년 359만 톤으로 거의 최저 수준에 육박했으나 이후 증가해 2004년에는 431만 톤을 기록하였다. 수산물의 경우 2004년까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16.9만 톤에 이르렀다.

2000년대 북한의 수출 상품구조에서 나타난 특징은 동물제품 및 비금속류의 비중 증가, 섬유제품의 비중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동물

<sup>33</sup> 북한의 국내 생산실적은 한국은행,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참조.

<sup>34</sup> KOTRA, 『200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제품의 비중 증가는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인 수산물, 어패류 등 1차 상품의 수출 증가세가 2000년대에 들어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철광, 아연 등의 수출도 다시 늘어나고 있어 광물성 생산품과 비금속류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섬유제품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기계·전자의 비중 또한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1차 상품 위주의 수출산업이 부각되는 수출상품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볼 때 2000년대 북한의 산업구조는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V-6> 수출 상품구조의 변화 (2000~2004)

	2000	2001	2002	2003	2004
1. 동물제품 (%)	17.3	24.4	35.5	37.0	33.0
2. 식물제품	5.4	6.5	3.7	3.2	2.7
3. 광물성 생산품	7.6	7.8	9.5	7.1	14.9
4. 화학, 플라스틱	7.9	6.9	5.8	4.0	3.8
5. 목제품	1.9	0.9	1.4	2.0	1.6
6. 섬유제품	24.8	21.6	16.7	17.1	11.3
7. 귀금속	1.7	2.2	2.0	2.1	0.6
8. 비금속류	7.8	9.3	7.8	11.5	16.1
9. 기계, 전기전자	18.6	15.1	11.6	12.0	11.9
10. 기타	7.0	5.6	5.9	4.0	4.1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1~2004년도)

한편 수입상품구조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광물성 생산품인 에너지 자원의 수입비중 증가이다. 북한의 원유도입량은 최근 수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북한은 러시아 및 중국으로부터 정제유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기계류의 비중이 거의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비록 2000~2004년 기계류의 수입 비

중이 큰 변화 없이 14.3~17.5%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이 기간 전체 수입이 2배 정도 증가했다는 사실은 기계류 수입도 2배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북한이 산업 정상화에 필요한 설비를 보충하기 위해 기계류 수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표 IV-7> 수입 상품구조의 변화 (2000~2004)

	2000	2001	2002	2003	2004
1. 동물제품 (%)	1.4	4.6	6.8	6.7	8.7
2. 식물제품	11.3	13.6	7.8	7.5	7.6
3. 유지, 조제식료품	6.3	5.5	4.9	6.0	9.4
4. 광물성 생산품	12.2	14.3	15.5	20.9	22.3
5. 화학공업제품	7.7	7.6	8.0	6.5	5.8
6. 플라스틱제품	4.8	4.1	4.3	4.4	4.2
7. 섬유제품	12.2	12.6	10.4	7.9	5.1
8. 비금속류	6.1	6.2	5.8	10.7	7.0
9. 기계류	14.6	15.0	15.4	17.5	14.3
10. 차량	10.4	5.5	5.0	3.8	4.2
11. 기타	13.0	11.0	16.2	8.2	11.3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1~2004년도)

## (2)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경제회복기 북한의 경제정책은 먹는 문제의 해결과 선행부문의 정상화로 집약된다. 이런 혁명적 경제정책은 1999년 이래 경제성장률이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 이나마 그 성과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7.1조치와 후속 조치도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왔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성과

는 산업구조에도 다소나마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이 기간의 산업 부문별 성장을 살펴보면 경제회복이 시작된 첫 해인 1999년에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전부문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24.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광업도 14.1%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후 전체 경제성장률이 소폭에 머물러 있어 산업 부문별 성장률도 1999년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별 성장에서의 특기할 사항은 건설업 부문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유지된 반면 서비스업의 성장은 거의 멈추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은 산업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건설업 비중의 확대와 서비스업 비중의 정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편 2002년 광업 부문의 성장률이 -3.8%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광업부문의 비중 확대를 예견할 수 있다.

<표 IV-8> 산업별 성장률 (1999~2004)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림어업 (%)	9.2	-1.9	6.8	4.3	1.7	4.1
광공업	9.9	2.2	3.9	-2.5	2.8	1.0
광업	14.1	5.8	4.8	-3.8	3.2	2.5
제조업	8.5	0.9	3.5	-1.9	2.6	0.4
(경공업)	2.4	6.2	2.3	2.5	2.6	-0.2
(중화학공업)	11.6	-1.5	4.1	-4.4	2.6	0.7
전기가수수도업	6.8	3.0	3.6	-3.8	4.2	4.5
건설업	24.3	13.6	7.0	10.5	2.1	0.4
서비스업	-1.9	1.2	-0.3	-0.2	0.6	1.4
(정부)	-4.5	0.5	-0.4	-1.3	0.2	0.0
(기타)	3.9	2.5	-0.1	2.4	1.7	4.6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

경제회복기 북한의 산업구조는 경제후퇴기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양호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업과 건설업 등 주로 국내 생산에 기반을 둔 부문에서의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부문에서의 호전된 변화가 진행되었다. 경제침체에 과도하게 비중이 확대되었던 서비스업 부문이 이 기간에 거의 정체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야 할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 확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건설업과 광업의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건설업의 비중은 경제회복기 초기 년도인 1999년 6.1%(1998년 5.1%)에서 2004년에는 9.3%로 높아졌다. 이렇게 건설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시멘트 등 건축자재의 생산 확대, 주택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의 호조에 따른 것이다. 광업의 비중 또한 7.3%(1998년 6.6%)에서 8.7%로 높아졌다. 이것은 북한이 선행부문의 정상화에 중점을 둔 결과 석탄 및 광물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제조업 부문의 비중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공업의 비중이 소폭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북한이 선행부문을 강조해 왔으나 제조업의 기간산업 분야를 단기간에 호전시킬 수 있을 만큼 북한의 전반적인 산업 여건이 뒤따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중화학공업은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신기술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북한은 이 부문을 현대화할 여력이 없다. 그러나 경공업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설비 현대화 등에 필요한 투자규모가 적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 확대가 용이하다. 7.1 조치 이후 일부 경공업 부문에서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생산 확대가

경공업 부문의 비중 확대에 다소나마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서비스업의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업 비중은 1998년 35.6%로 최고를 기록한 이래 1999년부터 2004년까지 3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지난 경제후퇴기에 이미 서비스업이 다른 부문의 축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수준으로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7.1조치 이후 상업유통 활성화와 도소매업이 늘어났으나 비중이 큰 정부서비스업은 제자리를 유지함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7.1조치 및 추가 조치의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넷째, 농림어업의 경우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농림어업의 비중은 1999년 31.4%로 최고를 보였으나 2004년까지 26.7%로 낮아졌다. 전반적인 농림어업부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인 농림어업이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표 IV-9>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1999~2004)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림어업	31.4	30.4	30.4	30.2	27.2	26.7
광공업	25.6	25.4	26.0	25.7	26.8	27.2
광업	7.3	7.7	8.0	7.8	8.3	8.7
제조업	18.3	17.7	18.1	18.0	18.5	18.5
(경공업)	6.1	6.5	6.7	6.9	7.0	6.7
(중화학공업)	12.2	11.2	11.4	11.0	11.5	11.8
전기가스수도업	4.5	4.8	4.8	4.4	4.5	4.4
건설업	6.1	6.9	7.0	8.0	8.7	9.3
서비스업	32.4	32.5	31.8	31.6	32.8	32.3
(정부)	22.8	22.6	22.2	22.0	22.9	22.6
(기타)	9.6	9.8	9.7	9.7	9.8	9.7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

1990년대 산업부문별 고용인구의 비중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1990년대 북한 경제후퇴기에 생산액(부가가치)을 기준으로 한 북한 산업구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한 부문(공업, 농업 및 건설부문)에서 생산액(부가가치 기준)에 따른 산업부문별 비중과 고용인구에 따른 산업부문별 비중을 비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경우 고용인구에 따른 비중보다 생산액에 따른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 생산액에 따른 공업부문(광업 포함)의 비중은 25.6%이지만, 고용인구에 따른 비중은 38.3%이다. 농업부문의 경우 생산액에 따른 비중은 임업과 어업을 포함하더라도 31.4%이지만, 고용인구에 따른 비중은 단순히 농업만으로도 30.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북한의 공업과 농업부문의 1인당 노동생산액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부문에서는 오히려 고용인구에 따른 비중(4.2%)보다 생산액에 따른 비중(6.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0> 부문별 고용인구의 비중 변화

	1993	1995	1999
공업 (%)	37.4	38.2	38.3
농업	30.7	30.8	30.9
건설	4.2	4.1	4.2
교통·통신	3.7	3.7	3.8
상업	4.6	4.6	4.6
교육·문화·보건	7.7	7.7	7.7
행정	2.3	2.3	2.3
기타	9.4	8.6	8.3
계	100.0	100.0	100.0

자료: <표 IV-2>에서 산출.

# V

## 북한산업 발전을 위한 남북한 협력



## 1. 북한의 산업정책 방향

### 가. 공급애로의 해소

북한산업의 침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산업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및 원자재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심화되었다. 에너지 및 원자재의 부족으로 북한의 주요 산업설비들은 10~30% 수준에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나마 가동 중인 설비들도 전력사정의 악화로 번갈아가며 생산하는 교차생산이 일반화된 실정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1988년 4,070만 톤에서 1998년에는 1,860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나 2004년에는 2,28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최고 수준인 1988년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같은 기간 전력생산은 282억kWh에서 170억kWh로 줄어들었다가 2004년 현재 북한은 206억kWh를 생산하고 있다. 원유도입량은 1989년의 260만 톤에서 1999년에 31.7만 톤으로 격감하였다가 2004년에는 61.3만 톤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원유도입량의 감소로 수송용 연료, 유제품과 화학수지 생산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에너지의 국내생산 저조와 해외도입 부진으로 에너지 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을 때 산업활동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은 중공업 위주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에너지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에너지 부족과 함께 원자재 공급의 감소도 북한의 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sup>35</sup> 예를 들면 철광석 생산은 1990년 843만톤에서

<sup>35</sup>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위원회는 1991년 북한은 전력 500억kWh, 석탄 6,000만 톤,

1998년에는 289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철광석 생산은 증가하여 2004년에는 457.9만 톤을 생산하였으나 이것은 1990년 생산량 대비 54%에 불과하다. 철광석 생산의 감소는 강철 생산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것은 강철을 소재로 하는 관련 산업의 생산량 저하를 가져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시멘트 생산도 1990년 613만 톤에서 1998년에는 315만 톤까지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 시멘트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4년 생산량은 563.2만 톤을 기록하였다. 건설 자재인 시멘트의 증산으로 건설부문이 활기를 되찾아 2000년대 북한 산업에서의 건설업 비중은 크게 확대되었다.

산업 활동에 직결되어 있는 에너지 및 원자재의 공급애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북한산업의 재건은 기대할 수 없다. 채굴장비의 개선 등 에너지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늘려나가는 한편 에너지 다소비형 중공업을 경공업 위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국내투자재원이 고갈되어 있는 만큼 해외로부터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여 에너지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 나. 수출산업 육성

북한의 주력수출품은 수산물 및 어패류 중심의 동물제품, 철광석과 아연 등의 광물성 생산물, 부가가치가 낮은 반제품 형태의 철강·금속 제품, 그리고 섬유제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북한의 수출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섬유·의류제품의 수출 감소는 일본에 대한 위탁가공이 감

---

강철 590만 톤, 화학비료 450만 톤, 시멘트 1,140만 톤 등을 실제 생산하였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수치는 한국은행의 추계치(247억kWh, 2,920만 톤, 179.3만 톤, 138.5만 톤, 474.7만 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소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북한의 2004년 수출액은 10.2억 달러였으나 수입액은 18.4억 달러로 무역적자규모는 8.2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수출지향적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북한도 1980년대 중반부터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을 강조해 왔지만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일성은 1994년 신년사에서 대외무역의 발전을 강조하고 시장 개척, 신용 확립, 수출품 생산기지 확충, 품질 제고, 가공 무역의 개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획득으로 해외로부터 원자재 및 설비조달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출산업의 육성은 북한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섬유산업은 경공업부문 및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비교적 발달된 분야이다. 의류부문에서 내수용 의류는 제품의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외화획득을 위해 1980년대 중반 이후 설립된 몇몇 합영기업에서 생산·수출되는 의류제품은 해외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6</sup> 이와 같이 북한은 노동집약적 경공업부문에서 수출산업을 우선 육성해야 한다. 수출과 연계하여 임가공생산, 부품생산, 조립생산 등을 의류·섬유부문에서 전자·전기부문 등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대외경제부문의 개방 확대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와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북한은 수출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

<sup>36</sup> 이 중 대표적인 합영회사는 모란봉합영회사(조총련의 모란봉주식회사와 북한의 은하무역총회사간에 합영으로 1987년 설립)로 일본에서 기술, 설비, 원자재를 들여와 북한에서 임가공하여 일본으로 의류를 수출하고 있다. 1993년 말 현재 북한에 설립된 의류·봉제부문의 합영기업은 모란봉합영회사를 포함하여 23개사로 알려져 있다.

## 다. 산업구조의 개편

북한은 중공업부문을 주도산업부문으로 성장시키면 농업 및 경공업분야에서도 연쇄효과가 나타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논리에 입각해 중공업 우선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결과는 중공업 부문만 비대해지고 경공업부문 및 다른 산업부문은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중공업은 자체기술과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에 비해 생산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은 중공업부문의 합리화 작업을 추진하여 중공업부문의 방만한 조직을 축소하고 비효율을 제거하여 생산단위의 채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중공업부문을 축소함으로써 여기에서 확보되는 재원을 경공업부문에 투자해야 한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은 경공업 발전에 역점을 두고 완충기(1994~1996)의 경제 전략의 하나로 경공업제일주의를 내세워 왔다. 신발과 의류산업을 발전시키고, 식품과 일용품개발을 가속화시키며 수출품개발을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기존기업을 현대적인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체계화, 전기화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기업은 외국과의 기술교류가 적어 이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기술발전에 익숙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낙후된 경공업기업의 현대화에는 막대한 자본투자가 요구되지만 외화부족과 외자유치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기술정보, 인센티브 등과 같은 산업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장·기업소 및 각 부처 사이의 조정능력이 부족한 것도 경공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들의 개선이 병행할 때 산업구조의 성공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은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인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군수와 민수의 복합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화학공업부문을 민수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또한 과거 구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중화학공장 시설들을 현대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2. 남북한 협력 방안

### 가. 선택적 산업협력

#### (1) 노동집약적 경공업 육성

북한은 개발도상국의 일반적인 성장모델인 노동집약적 산업의 육성을 통해 우선 경공업 제품의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정상화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저렴한 유희노동력 확보를 통한 노동집약적 경공업 산업은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정상화를 위한 구조 조정과정에서 경공업부문의 육성은 상대적으로 자본 소요가 적은 반면 중공업부문의 시설 현대화에는 많은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섬유·의류산업과 전기·전자산업은 전략적 육성이 가능한 유망한 수출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다.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섬유, 의류, 신발, 전기·전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가공 및 수출기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본 공단에 진출을 희망하는 남한 기업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은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섬유산업은 생산기반 및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대외교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섬유산업은 북한이 가진 거의 유일한 생산요소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도 빠른 기간에 수출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실제로 북한은 의류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와 함께 봉제 임가공공장 및 수출피복공장 등의 설비 개체를 통한 현대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전기·전자산업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섬유·의류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육성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비록 생산기반과 기술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있지만 북한의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부품생산 및 조립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공정이 상당히 많다. 최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전기·전자산업은 일차적으로 소규모 투자를 통한 육성 가능성이 있고, 경제 전체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육성이 필요하다.

북한의 섬유·의류, 봉제완구, 신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산업과 가전 등 전기·전자산업은 남한과의 협력을 통한 육성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북한은 남북한 산업협력을 통해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조달하고 남한의 수출 산업화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다. 산업협력을 위해 남한은 유희시설 및 설비를 개성공단 인근 황해도 권역 및 평남권역 소재 공업지구로의 반출 확대 및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에 현대화된 첨단기술 경공업 중심 공장 설립을 위한 대북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 남북한 산업협력 차원에서 섬유, 가전, 잡화 등의 분야에 진출한 남한 기업과 북한 내 동종업종과의 기술제휴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은 제품 및 공정간 분업 추구를 통해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에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sup>37</sup>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2005.7.9~12, 서울)에서 남과 북은 대북 경공업 지원과 지하자원 개발을 연계한 유무상통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sup>38</sup> 이것은 최종 생산물의 단순 교역보다 남북이 가진 자원·자본·기술 등 경제적 요소를 결합한 경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경제협력의 범위 확대 및 남북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이 가시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남측은 북측에 경공업제품 생산용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남측에 대해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보장 및 생산물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방식을 원용한다면 북한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산업 육성을 위한 남북한 산업협력의 심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sup>39</sup>

---

<sup>37</sup> 예를 들면, 개성공단을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안산, 시흥 등 공단과 네트워크하는 분업 방식도 가능하다. 이석기, “본격화되는 개성공단 사업,”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5. 1), p. 35.

<sup>38</sup>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2005.7.9~12, 서울) 합의문 1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우선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한다. 쌍방은 앞으로 경제협력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 중 평양에서 실무자간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sup>39</sup> 대북 투자기업인 성남전자의 경우 콤팩트램프 생산 등 대북 채권에 대한 회수 대체품으로 북한산 아연괴를 반입한 바 있고 향후 반입량의 증가와 함께 다른 원자재의 추가 반입도 예상된다.

## (2) 핵심 기간산업의 현대화

북한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산업 육성과 함께 공업화 과정을 통해 구축한 중화학공업 산업기반을 중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선택적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철강, 화학, 기계 등 중화학공업의 생산 정상화를 위해 국제적 협력 하에 노후화된 생산설비의 현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공업 부문의 설비와 기술이 낙후되어 개보수가 불가능한 공장·기업소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주요 중공업 산업시설과 공장의 상당부분은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것으로 이들 노후화된 공장의 현대화는 북한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북한의 노후화된 중화학공업 산업시설의 개·보수, 현대화 및 공동 운영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1995년 체르노미르진 러시아 전총리는 서울 방문시 소련이 북한에 지원한 17개 공장들이 부품과 원자재 부족으로 가동이 중지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 측에 이들 공장의 회생에 공동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 산업시설의 재가동 및 현대화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실제로 이 분야에서 남북한과 러시아간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중화학 산업시설의 현대화는 한국이 자본을 제공하고, 러시아가 기자재, 시설 및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들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러시아의 원료, 부품 및 기술을 바탕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한국의 단독 투자에 비해 남북한과 러시아의 3자간 산업협력이 효율적이며 북한의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남·북·러 3자 협력으로 생산된 제품은 러시아 및 북한시장, 제3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중화학 산업시설 현대화의 최대 관건은 소요 재원의 조달 문제이다. 러시아는 북한 산업시설 현대화와 관련하여 남·북·러 3자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자금 지원으로 러시아산 기계와 설비를 구매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이 북한 중화학 산업의 현대화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 중화학 산업시설은 유망한 핵심 기간산업을 선택적으로 현대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 기간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북한의 전략산업으로는 철강, 비철 금속을 중심으로 한 금속산업과 기계산업을 들 수 있다.<sup>40</sup> 이들 산업은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산업으로 북한에서 상당 수준의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기술수준이나 기술체계에 있어 다른 중화학 분야 산업보다 상대적인 비교우위에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산업협력을 통해 일정정도 구조 고도화 및 현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수출산업으로서의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의 기계·금속산업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주물 등 일부 업종은 3D 업종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및 북한 지역으로의 진출 수요가 매우 크다. 기계·금속분야의 남북한 산업협력을 위해 남한에서 3D 업종으로 취급받고 있는 금속가공분야의 북한 인력 활용을 위해 개성공단 이외 지역으로의 설비진출과 대북 투

---

<sup>40</sup> 이석기,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북한 경제발전 전략의 모색,” 『평화를 위한 우리의 한반도 정책 대구상』 (통일문제연구협의회·경기개발연구원 광복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5. 7. 26~27), p. 205.

자에 의한 현대화된 대규모 기계·금속공장의 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sup>41</sup> 해주 및 평양공업단지 내 기계·금속산업 관련 주요(특급) 공장·기업소를 남북한 합병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3) 정보기술(IT)산업 육성

북한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단기간에 빠른 성장과 함께 이를 통해 경공업과 중화학분야 공업의 생산능력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하더라도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정보기술(IT)산업의 경우에도 사회의 정보화가 일정 수준이상 도달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정도로 발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IT산업은 일부 분야에서 기초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고, 교육과 훈련이 잘 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현재 북한경제의 규모나 산업발전 단계를 고려한다면 특정 분야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초 첨단 관련 산업의 중점적 유치를 목표로 하는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계획과 결부하여 북한의 IT산업을 육성한다면 남북한은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up>41</sup> 추원서, “북한산업 정상화 지원과 남북협력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제7권 제8호, (한국개발연구원 2005. 8), p. 23.

첨단기술 산업분야에서 남북한 산업협력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IT산업이 유망하다. 특히 기술 및 인력의 측면에서 북한이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우선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진출 기업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공동 개발 및 위탁개발 형태로 북한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남측 자본과 북측 기술 인력을 결합한 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텐츠 등 부담이 적고 부가가치가 큰 분야가 최우선 협력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하드웨어 분야는 북한 전자산업의 발전, 대내외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이 분야에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인쇄회로기판, 반도체부품, 교환기, 광케이블 등 다양한 사업을 개성공단과 연계하여 평양 등에 원부자재와 설비를 제공하는 임가공 및 분업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sup>42</sup>

평남권역의 평양과 남포지역은 모든 제조업종에 걸쳐 입지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단순 제조업과 함께 북한 산업의 연구개발을 선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업종의 연구개발기능이 중점적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남포-평양지역을 정보기술, 전자 등 첨단산업의 거점지역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IT산업의 경우 첨단산업 기반이 확보된 수도권은 R&D(연구개발), 평양지역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부품생산 및 조립, 개성공단은 주요 생산 공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분업구조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개성-평양지역을 잇는 IT 축의 형성이 가능하다.

<sup>42</sup> 김영운,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번영,”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149.

## 나. 전략적 인프라협력

### (1) 에너지 협력

산업 정상화 및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북한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에너지난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산업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북한의 낮은 공장가동률의 주된 원인은 전력부족 때문이다. 2004년 말 기준 북한의 발전량은 206억kWh로 남한 발전량 3,421억kWh의 6% 수준이며, 발전용량은 777만kW로 남한 발전용량 5,996만kW의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한의 전력 부족현상은 개성공단 개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은 개성공단 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과 관련하여 한전이 설계·시공·운영을 담당하며 남측에서 공급하도록 하는 전력공급합의서를 체결(2004.12.3)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16일부터 배전방식(전봇대 설치)으로 1.5만kW를 남측에서 공급하고 있다. 본 단지에 대해서는 전력 10만kW를 송전방식(송전탑 설치)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북한은 부족한 전력을 러시아로부터 송전방식을 통해 공급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북한과 러시아는 에너지 교류에 대한 기술적 측면 및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선 건설을 통해 북한에 공급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다. 북한은 러시아 연해주에 대해 전력교환 프로젝트(러시아와 북한이 유휴전력이 존재할 경우 상호공급)를 제안하였고, 또한 러시아에 40만kWh 전력 공급을 요청한 바 있다.<sup>43</sup> 이 경우 러시아의 부레이스카야(Bureyskaya) 수력발전소에서

<sup>43</sup> 김삼식, “2003년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 전망” (KOTRA 심층기획조사, 2003) <[www.globalwindow.org/front/nk02/nk02\\_list.jsp](http://www.globalwindow.org/front/nk02/nk02_list.jsp)>.

생산된 전기를 북한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화력발전소에 석탄 등 발전연료나 발전 자금을 제공(남한이 자금 부담)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북한이 공급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러 3자간 협력을 통해 남한이 자금을 부담하면서 러시아산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직접 북한에 대해 전력을 지원·협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5년 7월 12일 '대북 중대 제안'을 통해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할 경우 남한에서 생산한 200만kW 규모의 전력을 북한에 송전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이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경기도 양주와 평양간 직접 송전 선로 건설을 통해 3년 이내에 북한 핵 폐기와 함께 송전방식으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sup>44</sup>

대북송전은 우리의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예비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북송전을 위한 별도의 발전소 건설은 필요치 않다. 다만, 송전방식에 따라 북한의 일부 지역을 분리하여 연결하는 방안으로 할 경우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일부 배전망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배전망 지원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측이 제안한 전력 제공을 북측이 받아들일 경우 남한은 200만kW 송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전력은 개성을 중심으로 남북연결망과 주변지역 연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

---

<sup>44</sup> 이러한 대북 송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송전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조5천억 원~1조7천억 원 정도, 그리고 연간 발전비용 6천억 원~8천억 원 정도를 감안한다면 총 7조5천억 원~9조7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통일부, “국민행동본부 대북송전사업 관련 신문광고에 대한 정부입장,” 『대북정책초점』 (서울: 통일부, 2005 9).

해 나가야 한다. 대북송전사업을 통해 북한은 해주 및 평양공업단지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한 전력협력에 있어서 송전사업의 대안으로 이들 지역에 남한의 지원에 의한 발전소 건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2) 남북 연계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북한 산업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 한국은 SOC 확충 차원에서 북한의 철도·운송 부문 개보수를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SOC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시급성에 따른 교통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을 지원·협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교통 및 물류망 연계는 장기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유라시아 물류망 구상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한다.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남한은 생산 및 수출기지를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지역에 이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개성공단과 인접한 북한 지역의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배가될 수 있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개통하여 남북간 교역에 활용하고 철도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연결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우선 개성지역에 대한 교통인프라는 남측의 지원에 의해 빠른 기간에 연결해 물류수송에 기여하도록 한다.

남북한 산업협력을 위한 북한 교통인프라 확충의 최우선 과제는 현재 추진 중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완성하고, 개성-평양간 철도·도로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경의선 구간의 연결공사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현대화 방안의 경우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sup>45</sup> 따라서 북

한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산업 정상화 및 발전이 가시화 되기 전까지는 경의선 구간의 연결과 부분적인 현대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황해도 권역의 개성-해주-사리원을 연결하는 도시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개성공단과 이 지역의 연계발전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

수도권(인천)과 개성공단의 지리적 인접성은 물류에 있어 최대의 경제적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심천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홍콩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최대한 활용키 위한 것이었다. 개성(공단)은 물류 흐름에 있어 한반도 중앙회랑(평양-개성-서울)과 서부회랑(평양-개성-인천)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분간 개성공단과 수도권의 물류이동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따른 중앙회랑만이 이용 가능할 뿐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을 경우 원자재 수급 및 생산물자의 판로에 영향을 미쳐 공단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개성지역의 경우 항만이나 공항이 없으므로 현재 물류수송을 위해서는 철도 및 도로에 의한 육로수송에 의존해야만 한다. 우선 진행 중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통해 1단계 개성공단 지역의 생산물자에 대한 물류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인근에는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항구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인천항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수출입 물동량은 서부회랑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중앙회랑을 경유 인천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성공단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는 개성-인천을 연결하는

---

<sup>45</sup> 김연규,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철도 연계방안,”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협력과 남북관계』 (북한경제 100인포럼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집, 2004 11. 11).

육로 및 해로를 개설해야 한다.<sup>46</sup> 개성공단과 인천사이에 물류축을 연결하고 두 지역에 대형물류창고를 건설하여 개성공단 생산품을 육로와 해로를 통해 남한으로 수송하거나 해외로 직수출할 수 있다. 동시에 수입 원자재를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는 등 물류체계의 다양화 및 효율화의 창출이 가능하다. 북한의 개성·개풍지역과 남한의 인천·강화지역을 연계하는 복합물류기지를 조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육로·해로를 갖춘 복합운송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 다. 기술인력 양성협력

현행 북한의 노동제도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북한 노동력을 채용할 때 북한의 노력알선기관(기업)과 충분히 협의하여 적절한 인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의 인력알선기관이 제공하는 인력의 기술·기능수준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북한 진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는 데 있어 북한 노동자들의 낮은 기술·기능수준 및 작업 몰입도의 저하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인력의 간접채용방식은 개성공단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개성공단은 북한에게 노동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인력채용의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 비록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sup>46</sup> 개성-인천간 직접 물류수송의 경우 ① 해상수송을 위해서는 개풍군 남단에 선착장(항구) 건설, ② 육로수송을 위해서는 개풍군 남단과 강화도 북단을 연결하는 연육교를 건설함으로써 개성공단은 인천의 항만, 공항, 철도·도로와 연계가 가능하다. 인천광역시, 『인천-개성 연계발전 추진전략』(2005.4), pp. 176~177.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업의 자율적인 북한 인력 채용권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 인력이 북한 내부에 존재해야 개성공단은 이들을 채용해 품질과 생산성 제고를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북한 경제·기술인력 양성에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한 산업협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북한 노동력의 기술수준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과 기능을 연마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장비와 설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북한 노동력의 기술·기능 향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유희설비를 가동이 중단된 북한의 산업시설 및 생산 공장에 이전하고 남한 기술자가 상주하면서 북한 노동자를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기술 전수를 위해 정부차원의 기술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는 진출업체의 현지 생산을 위한 설비에 국한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노동력에 대한 산업기술의 전수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과 같은 북한 진출 기업의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방안을 통해 북한 노동력의 기술·기능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47</sup> 현실적인 직업교육훈련방안의 모색,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실시, 점진적 접근방식에 따른 단계적 교육훈련 추진,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 훈련이 필요한 부분부터 실행, 기술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와 관리기법 제공, 생산의 전공정에 대한 교육 병행 등이다.

북한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에는 기술·기능교육뿐 아니라 노동

<sup>47</sup> 강일규 외, 『남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229~237.

의식의 전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 노동자로 하여금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단기간에 한국과 같은 시장경제 시스템의 노동의식으로 개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대북 진출 기업은 북한 노동자들의 형식주의,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개조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노동의식 전환을 위한 노력과 시스템을 개발해나가야 한다.<sup>48</sup>

북한 노동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북 위탁가공교역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에게 관련 제조·관리 기술을 습득케 하는 등 산업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대북 투자기업의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을 통해 협력사업의 모범적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상호 신뢰 구축과 함께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남북경협을 주도할 관리 및 기술 인력을 육성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 산업 정상화를 주도할 경제·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부는 북한 당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북한이 선정한 5대 부문(식량, 전력, 석탄, 기계금속, 철도·운수)의 혁신과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과 기술 교육센터 및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북한 근로자들의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한은 필요한 기술 인력을 상호 교류할 수 있게 된다. 남북협력을 통해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공장·기업소는 생산성 제고와 함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

<sup>48</sup> 김승철, “북한 노동력 활용에 관한 문제점,” 『통일경제』 제70호 (현대경제연구원, 2000. 10), p. 103.

# VI

## 맺음말



최근 북한은 전력, 석탄, 금속 등 기간산업 현대화와 2002년 7.1조치 이후 농업, 경공업, 상업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회생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0년대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산업은 설비 노후, 에너지·원자재·외화 부족,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외자유치 부진 등으로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산업 생산능력은 한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런 산업 생산능력조차도 석탄, 전력 등의 에너지부문과 기초 소재 분야인 철강 등 산업의 생산 부진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여타 산업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 생산능력 대비 2004년 북한의 생산실적은 대체로 10~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산업 가동률은 매우 저조하다. 남한의 산업별 기술수준과 북한의 기술수준을 비교해 볼 때 북한은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남한에 뒤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산업은 기술수준의 낙후와 함께 생산설비의 노후화라는 문제도 지니고 있다.

과거 북한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해 추진해 온 경제정책 기조인 중공업 우선정책, 대내지향적 발전정책 및 국방·경제 병행정책은 북한의 산업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는 1980년대 말에 진행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그 중요성을 상실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혁명적 경제전략인 3대제일주의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구조 조정 및 산업 불균형을 시정해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중공업 우선정책의 결과 초기 북한의 경제구조는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을 이룩하였다. 그렇지만 공업부문의 비중은 1965년에 64.2%를 기록한 이후 1970년에는 65%, 1983년에는 6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북한의 공업화 또는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른 발전 전략이 1960년대 말을 전후로 더 이상 탄력을 받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공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생산수단 생산부문(중화학공업)의 비중도 1970대에 들어와서 거의 증가하지 않아 이 부문의 비중은 1975년 63.7%에서 1982년 64.8%로 소폭 증가하였을 뿐이다.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1990년대 초부터 혁명적 경제전략인 3대제일주의(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채택·시행하였다. 북한이 3대제일주의를 채택한 것은 당면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분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른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구조 조정차원에서 3대제일주의를 관철함으로써 이를 시정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실물경제부문의 위축 심화로 북한경제는 1990년대에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경제후퇴기(1990~1998년) 북한의 산업구조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 광공업부문 및 건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광공업부문의 비중은 40.8%에서 25.6%까지 하락하였는데 이 중에서 광업의 비중은 9.0%에서 6.6%로 추락했고, 제조업의 비중은 31.8%에서 19.0%까지 하락했다. 건설업의 비중은 8.6%에서 1998년 5.1%로 줄어들었다. 둘째, 경공업과 중화학공업간 산업 불균형 완화가 강요되어 나타났다. 이 기간 경공업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25.6%에서 12.6%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셋째,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주로 정부서  
비스업의 확대에 의해 18.0%에서 35.6%로 높아졌다.

완충기 동안 심화된 경제난과 계획경제부문의 위축을 타개하기 위  
해 북한은 1998년을 기점으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3대제일주의  
관철에서 먹는 문제의 해결과 선행부문 정상화로 전환시켰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인 중공업의 우  
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으  
로 다시 되돌아 온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를 시행하고 이후 추가적인 경제개혁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분배에서의 평균주의를 타파, 국가재정 부담의 축소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북한경제는 1990  
년대 말부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였다.

경제회복기(1999~2004년)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난 특  
징으로는 첫째, 건설업과 광업의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 기  
간 건설업의 비중은 6.1%에서 9.3%로 높아졌고, 광업의 비중 또한  
7.3%에서 8.7%로 높아졌다. 둘째, 제조업 부문의 비중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공업의 비중이 소폭 확대되었다. 셋째,  
서비스업의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업 비중  
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3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  
다. 지난 경제후퇴기에 이미 서비스업이 다른 부문의 축소로 인해 상  
대적으로 너무 높은 수준으로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농  
림어업의 경우 비중이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은 산업 전반에 걸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산업 활동에 직결되어 있는 에너지 및 원자재의 공급  
애로가 해소되어야 하고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획득으로 해외로부터

원자재 및 자본재 조달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은 중공업부문의 구조조정 및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 산업정책의 방향은 공급 애로의 해소, 수출산업의 육성 및 산업구조의 개편에 모아져야 한다.

남북한 협력이 확대될 경우 북한산업의 정상화 및 발전은 조기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산업 발전을 위해 남북한은 선택적 산업 협력, 전략적 인프라협력, 기술인력 양성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남북한간 선택적 산업협력을 통해 북한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산업의 육성, 핵심기간 산업의 현대화 및 정보기술(IT)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인프라 협력은 에너지, 특히 전력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과 남북을 연계하는 교통·물류분야에서의 북한 인프라 확충이다. 북한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남북한 협력도 중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강일규 외. 『남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국토통일원. 『북한의 정치 경제』.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소련국제경제정치연구소. 『북한경제개관 1989-1990』.
- 이동휘. 『북한의 개방 가능성』.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1.
- 인천광역시. 『인천-개성 연계발전 추진전략』. 2005.4.
- 장영식. 『북한의 에너지수요와 공급』.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일제조사자료집』. 1995.
-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96』. 서울: 통일원, 1996.
- \_\_\_\_\_.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서울: 통일원 1994.
- 한국산업은행. 『동북아 2003: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국가별 편람』. 서울: 한국산업은행, 2003.
- \_\_\_\_\_. 『북한의 산업』. 서울: 한국산업은행, 2000.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2001~2004년도.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December 31, 1993.
- Choi, Soo-young.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Structure and Performance." Ph.D. Dissertation. Northeastern University, 1991.

## 2. 논문

- 김삼식. "2003년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 전망." KOTRA 심층기획조사. 2003.

<[www.globalwindow.org/front/nk02/nk02\\_list.jsp](http://www.globalwindow.org/front/nk02/nk02_list.jsp)>

- 김승철. “북한 노동력 활용에 관한 문제점.” 『통일경제』 제70호. 현대경제연구원, 2000. 10.
- 김연규.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철도 연계방안.”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협력과 남북관계』. 북한경제 100인포럼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2004.
- 김영운.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변영.”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변영: 평가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김일성. “사회주의 농촌 테제의 기치 높이 농촌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1994년 2월).”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리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기하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완충기와 우리 당의 혁명적 경제 전략.”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1.
- 서성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은 자주적인 대외 무역 관계 발전을 위한 물질적 담보.” 『경제연구』. 1996. 1.
- 서승환. “경공업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나서는 중요 전략적 과업.” 『경제연구』. 1994. 2.
- 이석기. “본격화되는 개성공단 사업.” 서울: 산업연구원, 2005. 1. 24.
- .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북한 경제발전 전략의 모색.” 『평화를 위한 우리의 한반도 정책 대구상』. 통일문제연구협의회·경기개발연구원 광복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5 7. 26~27.
- 장맹렬. “남북한의 산업구조 비교.”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6.
- 조강일. “무역제일주의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방침.” 『경제연구』. 1994. 2.
- 최경희. “현 시기 대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1995.2.
- 최명규.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를 창설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합법칙적 요구.” 『경제연구』. 1994.1.
- 추원서. “북한산업 정상화 지원과 남북협력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제7권 제8호. 한국개발연구원, 2005 8.
- 한충석. “농업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요구.” 『경제연구』. 1994. 2.
- Balassa, Bela. “Policies in Socialist and Private Market Econom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0, No. 2. June 1986.  
Holliday, John. "North Korean Enigma." Gordon White et al., eds.  
*Revolutionary Socialist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Sussex, U.K.: Wheatsheaf Books, 1983.

### 3. 기타

『로동신문』.

『조선신보』.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통일부. "국민행동본부 대북송전사업 관련 신문광고에 대한 정부입장." 대북  
정책초점. 2005.9.8.

한국무역협회. 『주요북한경제지표 1992』.

한국은행.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_\_\_\_\_. "북한 GDP 관련 통계."

\_\_\_\_\_. "200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1990/6/Add.35 (15 May  
2002).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여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적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중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Ⅱ)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